

#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 용역 관련 워크숍

일시 : 2015. 8. 13(목), 오후 3시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최 · 주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 충남연구원





##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3	3'	• 참석자 소개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15:03~15:10	7'	• 인사말씀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15:10~15:40	30'	• 주제발표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15:40~16:00	20'	• 자문단 공동연구 발표 1 - 총괄부문/관광시설·투자 부문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16:00~16:10	10'	• 휴식	
16:10~16:30	20'	• 자문단 공동연구 발표 2 - 공장·기업/지역개발 부문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수석연구위원
16:30~16:50	20'	• 자문단 공동연구 발표 3 - 대학 부문(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
16:50~17:40	50'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17:40	~	• 폐 회	



# C/O/N/T/E/N/T/S

## 주제발표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3

-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 공동연구 발표 ||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지역균형발전 전략...41

- 개요.....43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장·기업 부문/지역개발 부문.....57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대학 부문.....65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관광시설·투자 부문.....74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역개발 부문.....81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역발전추진과제 .....90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2015년 8월 13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충남연구원 공동 워크숍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의 균형발전 전략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발표 목차

1. 무엇이 문제인가?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4.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과제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6. 맺음말

본 발표문은 본인이 2015년 3월 5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이어갈 과제와 새로운 과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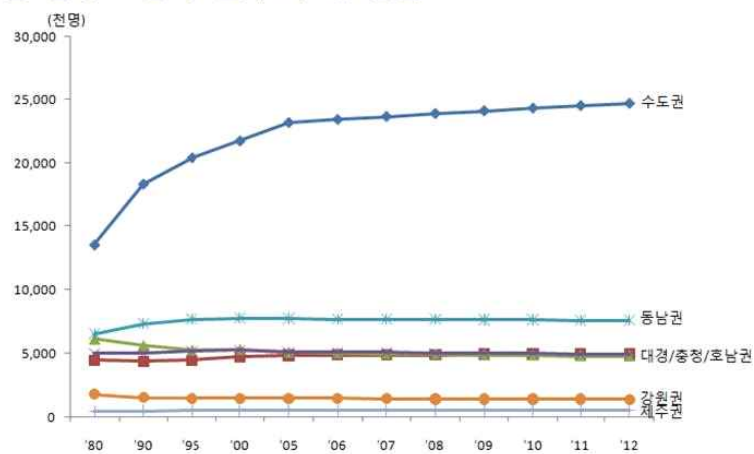
## 1. 무엇이 문제인가?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수도권 집중 정도

수도권 인구 : 전국 인구의 약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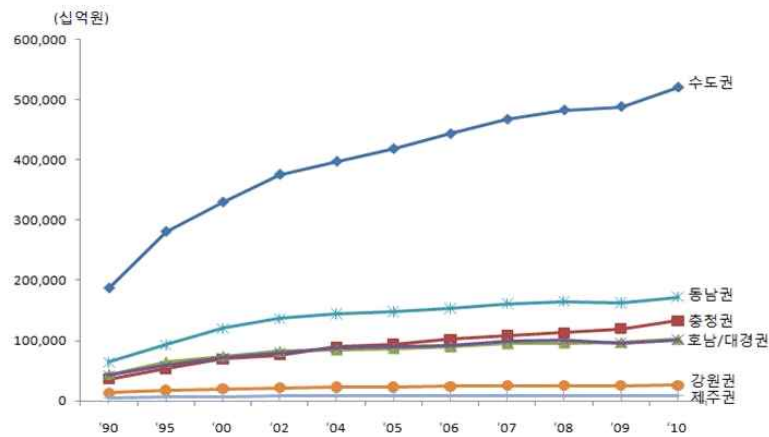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2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수도권 집중 정도

수도권 GRDP : 전국 GRDP의 약 절반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2

5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최근 수도권 집중의 현상과 본질

#### I 현상

- 인구,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에서 전국의 약 절반을 차지
- 수도권의 집중도가 그동안 계속 높아지다가 이제는 안정화
- 세종시, 혁신도시의 정착

➡ **이제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 없다 ?**

#### II 본질

- 권력, 기회, 고급인력, 소비, 소득의 수도권 (서울) 집중도는 더욱 심각
- 양적 지표에 포착되지 않는 삶의 질의 격차가 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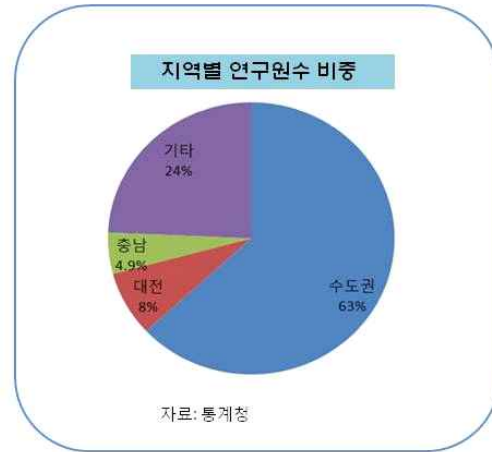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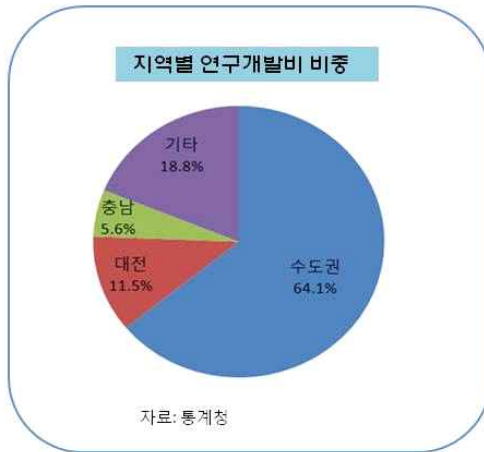
(예: 교육, 문화, 여가, 의료, 심지어 환경 ...)

6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고부가가치 산업 및 직종의 수도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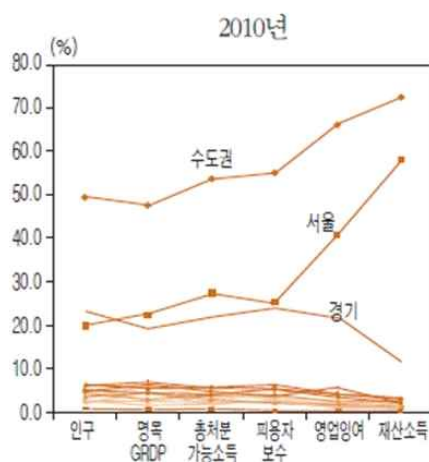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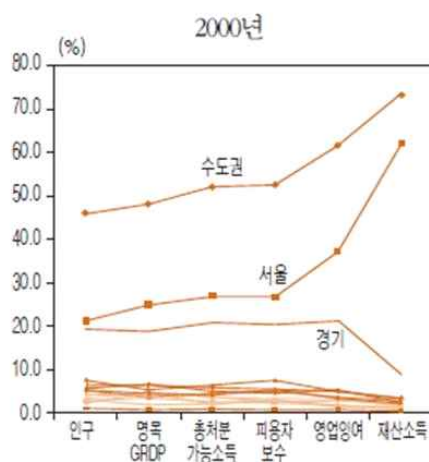


7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에 영업 잉여와 재산소득 집중



출처: 정준호 2013

8

## 1. 무엇이 문제인가?

1

문제는 권력과 기회, 편익의 수도권 (서울) 집중이다

- 현재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전국 대비 50% 수준
- 기업본사, 연구개발, 고부가가치, 고임금 산업/직종의 수도권 집중 가속
- 부동산 자산 가치, 교육 기회, 취업 기회 역시 수도권에 압도적 우위
- 비수도권에는 단순 실행, 저부가가치 산업/직종 배치
- 비수도권 경제 선순환 구조 붕괴와 학교와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 수도권 편익을 위해 타 지역의 비용과 희생 강요 (예: 물, 전력 의존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일종의 중심-주변 관계가 형성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2

9

## 1. 무엇이 문제인가?

1

권력의 서울 집중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텨야 한다.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언

10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권력의 서울 집중

서울은 곧 한국이다.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수도에 살고 있는 부재 지주들이며,  
그들은 지대를 받기 위해 지방으로부터 민중들을 '쥐어 찢는다'.

- 19세기 말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조선 방문기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  
한국의 정치는 서울에 있는 중앙 권력에 모든 것이 휘말려 들어  
가는 '소용돌이의 정치'

- 20세기 중반 그레고리 핸더슨의 한국 관찰기

11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세종시 건설, 중앙부처 이전. 그러나 아직도...

"총리는 물론이고 대부분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간 상황에서 전처럼  
청와대가 친정을 하다가는 정부가 마비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 웬만한 사안은 세종시에서 총리와 내각이 스스로 결정하고, ...  
구도가 되어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명색이 행정수도라는 세종시에선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총리와 장관은 세종시와 서울 사이를 끝없이 떠도는 유랑객  
이 되고 말았다."

- 경향신문 이상돈 칼럼 2015. 2. 17.

12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민간 권력의 서울 집중

- 1000 대 기업 본사의 70 % 이상 수도권 본사.
- 1000 대 기업 중 530개사 서울 본사. 매출액의 64.4 % 차지
- 1000 대 기업 중 707개사 수도권 본사
- 나머지 대기업 역시 지방의 본사는 형식상 본사,  
실질적 본사는 서울 소재 사무소.  
(예: 포항 포스코, 구미 제일모직, 울산 현대중공업,  
부산 한진중공업, 서산 현대오일뱅크, 창원 두산중공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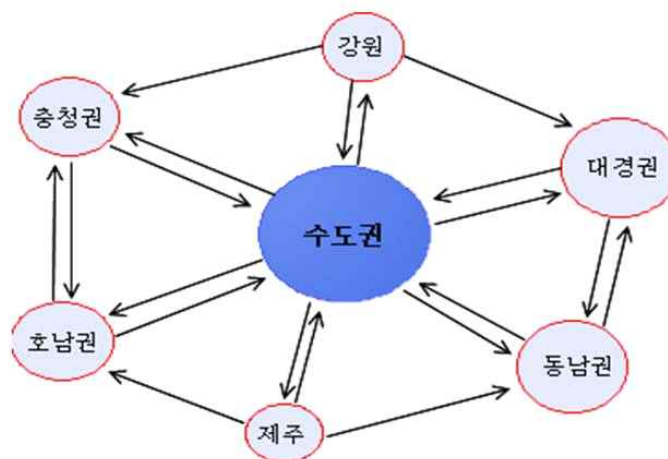
서울과 지방의 수직 계층적 지배 종속 구조 형성  
서울 본사: 관리 통제 기능 vs. 지방 공장: 생산 기능

13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수도권 중심의 지역 경제 이출입 구조



출처: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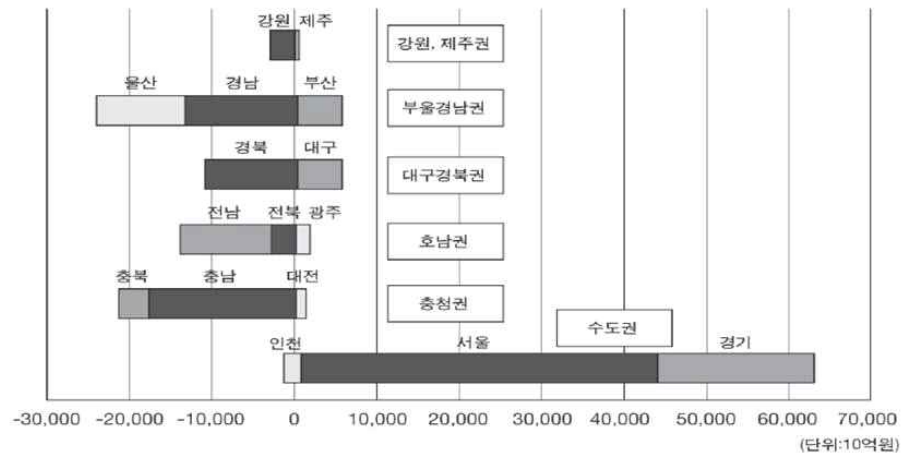
14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다른 지역의 소득



출처: 박경 20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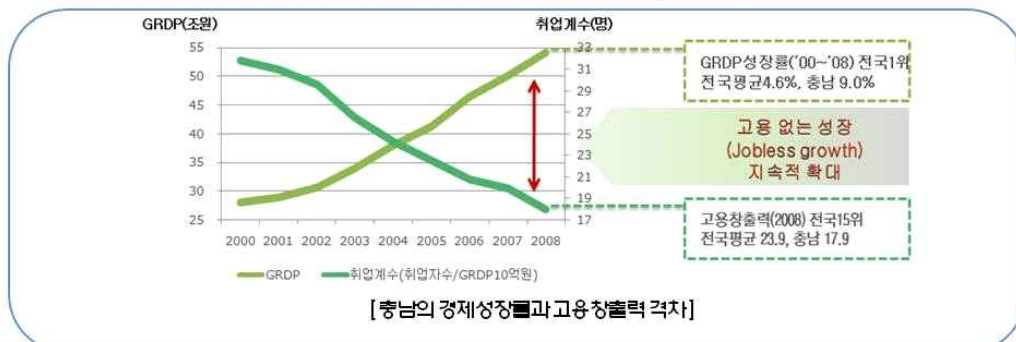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충청남도의 예 : 성장의 허와 실

#### Ⅰ 대기업 분공장 제조업 성장 (전국 대기업 공장의 16.8% 입지)

- 성장과 고용의 부조화: 고용 없는 성장 (GRDP 성장률 1위, 고용창출력 15위)
- 생산과 소득의 부조화: 소득 없는 성장 (소득수준 생산대비 58.5%)
- 소득과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 역외유출이 39.6%로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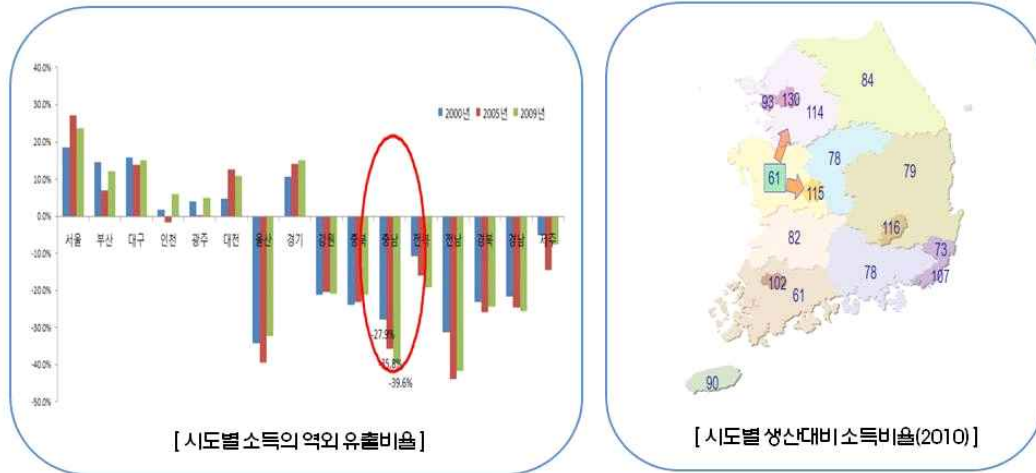
16



## 1. 무엇이 문제인가?

1

충청남도의 예 :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유사



17

## 1. 무엇이 문제인가?

1

명문 대학의 서울 집중과 대학의 공간적 서열화

- 서울 소재 대학 ( In Seoul ) - 수도권 대학 - 비수도권 대학  
대학 서열화 현상
- 지방 국립대학 위상 저하.

좋은 일자리의 서울 집중과 일자리의 공간적 서열화

- 좋은 일자리, 취업 기회 of 서울과 수도권 집중
- 서울 - 수도권 - 비수도권 일자리 서열화 현상
- 지방 일자리 취업 기피 현상

18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문화 권력의 서울 집중

- 언론, 방송, 출판, 영화, 미디어, 콘텐츠의 서울과 수도권 집중
- 문화/소비 산업의 서울 집중

중국 관광객도 서울로, 서울로

### 파워 엘리트의 서울 집중

- 서울에 우리나라 파워엘리트의 절반 이상 거주
- 서울과 수도권에 전문직, 고임금, 고급인력 집중

19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수도권 문화창조융합벨트 :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상징?

고양시에 K-Culture Valley 조성 1조원 투자. 향후 10년간 25조원 경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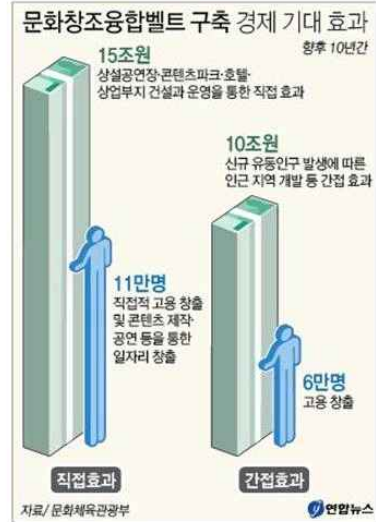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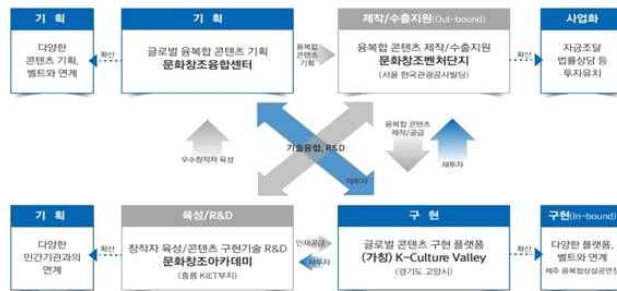
20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문화창조융합벨트

- ◆ 고양시 K-Culture Valley
- ◆ 서울 홍릉 문화창조아카데미
- ◆ 서울 상암 문화창조융합센터
- ◆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



21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교육 기회의 서울 수도권 집중

2015 서울대합격자 고교순위, 명단 보니 대부분 서울 소재 고교 ...

2015 서울대합격자 고교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6곳 ...

1위, 서울예술고등학교 93명 2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78명 ... 출처: 서울경제 2015. 2. 5.

#### 서울지역 자사고, 외고 서울대 합격자

연도	서울 자사고	외고
2013	186	189
2014	220	210
2015	259	182

2010~2012년 지정된 자사고 기준,  
시정 취소된 곳은 제외.

#### 2015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10명 이상인 외고

시도	고교	합격자
서울	대원외고	79
서울	명덕외고	32
서울	대일외고	32
서울	한영외고	31
경기	경기외고	23
경기	고양외고	23
대전	대전외고	15
경기	안양외고	15
경기	과천외고	11

#### 2015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10명 이상인 자사고 최종 등록자 기준.

시도	고교	합격자
경기	용인한국 외국어대부설고	61
서울	하나고	54
전북	상산고	53
강원	민족사관고	37
경기	안산동신고	28
서울	휘문고	28
경북	포항제철고	27
서울	현대고	23
서울	세화고	23
서울	중동고	21
울산	현대정운고	19
대구	경산고	16
서울	세화여고	15
전남	광양제철고	13
서울	보안고	12
인천	인천하늘고	10
광주	송덕고	10

#### 2015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10명 이상인 일반고

시도	고교	합격자
충남	한일고	24
서울	숙명여고	21
경기	수지고	20
경기	진성고	19
서울	단국대사범대부속고	19
서울	서울고	17
서울	경기고	16
서울	영동고	16
서울	서문여고	15
서울	반포고	14
경기	낙성고	13
경기	일서고	12
서울	진선여고	12
서울	중산고	12
경기	서현고	11
광주	고려고	11
서울	양재고	10
서울	보성고	10
서울	신목고	10
충남	공주대사범대부설고	10

출처: 동아일보 2015. 2. 18

22

## 1.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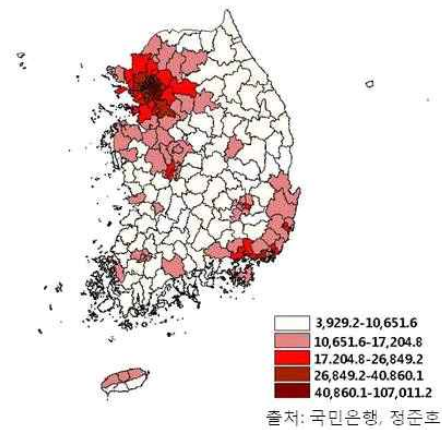
1

### 부동산 자산의 서울 수도권 집중

지역별 평균 주택 가격 격차 (2010년 기준)



지역별 아파트 평균 가격 분포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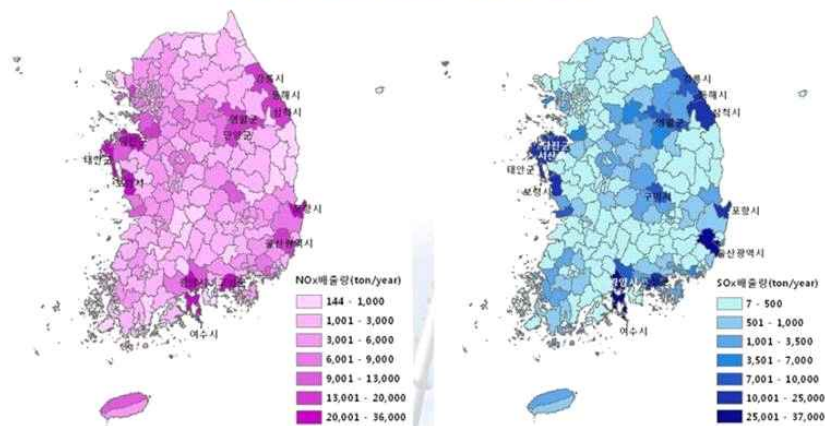
23

## 1. 무엇이 문제인가?

1

### 환경 피해도 비수도권이 심각

지역별 NOx와 SOx 배출량 분포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2011

24

## 1. 무엇이 문제인가?

1

환경 피해도 비수도권이 심각

지역별 발암물질 (IARC 1) 배출량



출처: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2012

25

## 1. 무엇이 문제인가?

1

위험 시설의 비수도권 입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입지



출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6



## I. 무엇이 문제인가?

1

환경 불평등 :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의 분리

지역별 전력 자급률 (전력 소비량 / 전력 생산량)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력자급률 (%)	3.0	190.3	1.3	310.0	0.5	1.7	38.1	24.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력자급률 (%)	75.9	7.7	276.8	33.9	256.0	162.4	210.4	77.6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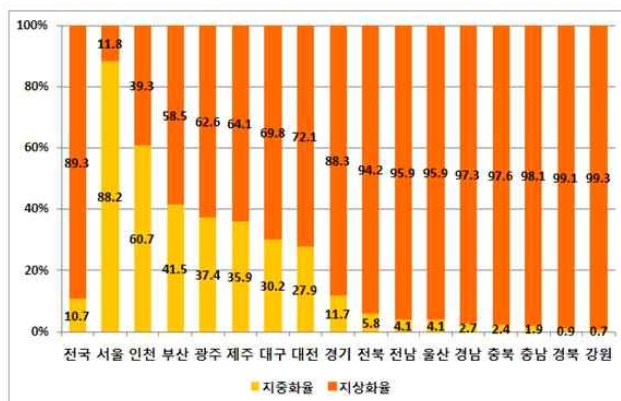
27

## I.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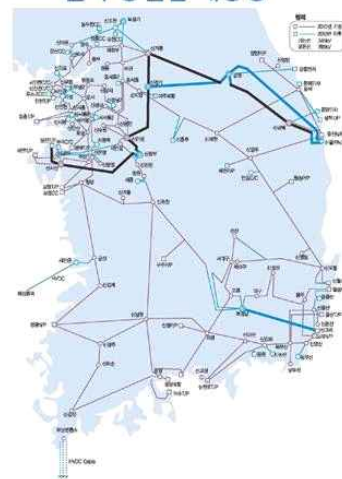
1

환경 불평등 : 전력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의 분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지상화 비율



전국 송전탑 배송망



28

## 1. 무엇이 문제인가?

1

무엇이 중요한 지역 불균형인가 ?

### Ⅰ 기존의 문제 인식

- 인구의 불균형
- 제조업 입지와 SOC 불균형
- 생산과 GRDP의 불균형



### Ⅱ 새로운 문제 인식

-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
- 소득과 일자리의 불균형
- 복지와 안전의 불균형
-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
- 환경보전과 개발(생태수용력)의 불균형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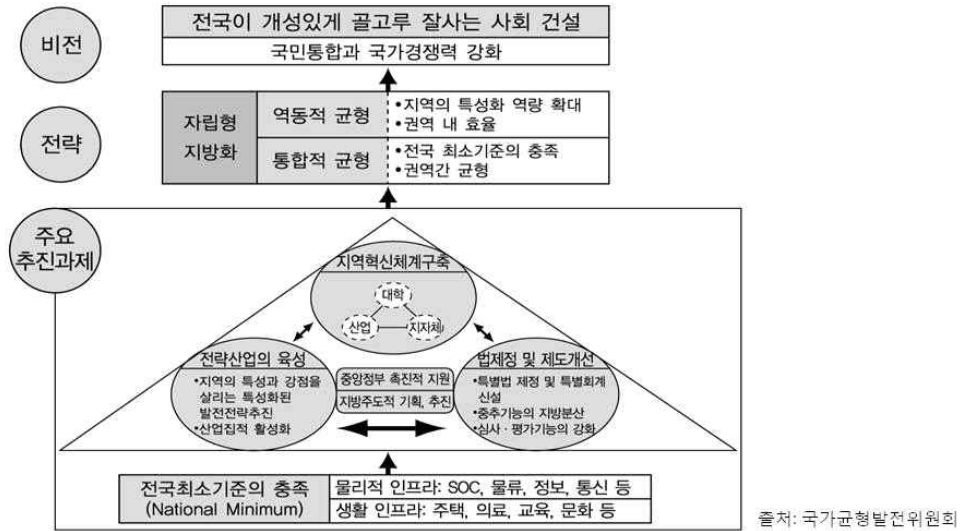
29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참여 정부 (200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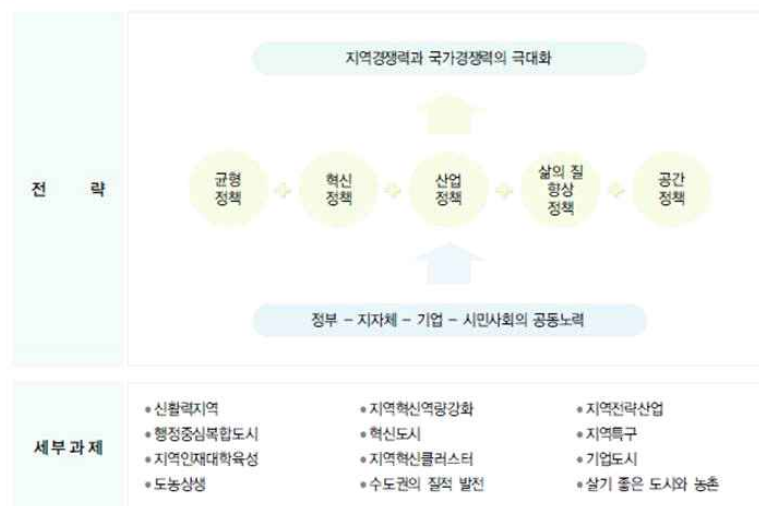


31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참여 정부 (2003-2007)



32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참여 정부 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한계

#### Ⅰ 성과

-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제도와 기구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삶의 질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적 추진
-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입각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 육성을 강조
- 신활력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

#### Ⅱ 한계

- 실행정수도가 위한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
-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 추진 좌절

33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이명박 정부 (2008-2012)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34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이명박 정부 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한계

#### I 성과

-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경제권 강조
- 광역경제권을 중심에 두고,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을 포함한 3차원 국토 구상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 I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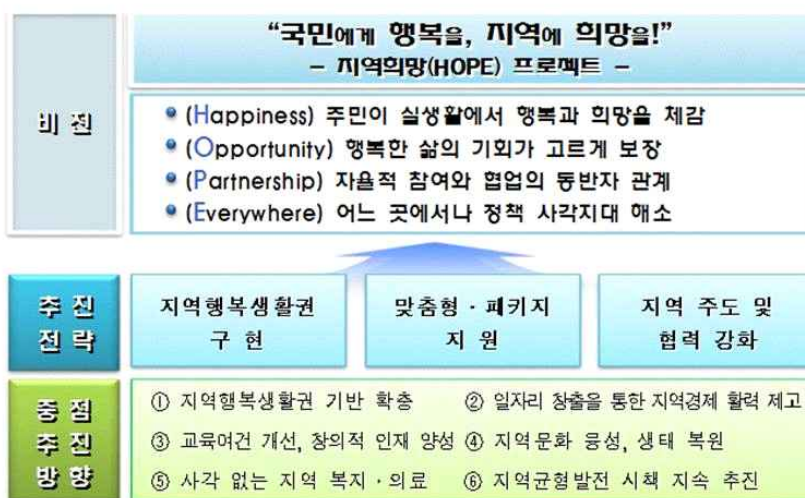
-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계승 거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위상 약화
- 광역경제권의 정책 거버넌스 실패로 유명무실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추진
-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수도권 규제 완화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초래

35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박근혜 정부 (2013- )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36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박근혜 정부 균형발전 정책 성과 ? 그리고 한계 ?

#### Ⅰ 새로운 강조

-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강조
- 균형발전의 주요 추진 단위로 지역행복생활권 강조
-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주민 체감형 균형발전 아젠다 제시

#### Ⅰ 예상되는 한계

- 구조적 차원의 지역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부재
- 시군구 단위를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실효성 불명확
-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과 기존 각 부서 정책의 차이점 모호

37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2

###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공통적 한계

#### Ⅰ 중앙정부가 주도, 지방분권에 무관심

- 전국 모든 지역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
- 지역 현장의 주체성과 자발성 고취 실패



지방분권의 실질적 추진

#### Ⅰ 지역간/부처간/민관 협력의 부재 : 거버넌스 실패

-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협력을 유도할 작동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실패
- 각 부처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정책 협력을 유도할 거버넌스 구축 실패
-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대학과 주민 등 민간 역량 참여를 유도할 거버넌스 구축 실패



관치에서 협치로, 거버넌스 강화

#### Ⅰ 균형발전 사업의 성과 취약

- 사전 기획 역량과 거버넌스의 취약으로 투입 예산 대비 성과 미비

38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공통적 한계

#### Ⅰ 표방하는 비전과, 방향, 기조는 훌륭하지만, 구체적 실천에 반영되지 못함

- 총론은 시의적절하나, 각론과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침
- 기존 사업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작동가능한 방법론 부재
- 실제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장 추진 주체와 조직, 지원 체계가 미비

➡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육성이 필요

#### Ⅱ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발전 정책, 중앙정부 역할과 지방정부 역할 구분이 모호

- 중앙정부가 개별 사업 세부 지침까지 간섭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주체성, 책임성 약화
-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발전 정책의 구분이 모호하고, 추진 주체의 책임성이 모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모호

➡ 중앙정부 역할/책임과 지방정부 역할/책임의 구분 필요

39

##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 총평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는 대체로 균형발전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 인정
- 참여정부가 가장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는 정권마다 달랐지만, 실제 사용한 정책수단은 대체로 대동소이
  - 민간 권력의 서울 집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부족
  - 중앙정부 주도, 부처 할거주의식 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 자율성과 특수성 무시. 지방정부와 주민의 소극적 참여
  - SOC 투자와 부동산 개발 중심의 균형발전사업 추진
  -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시장기제와 재벌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정부 부문에서만 공급자 중심 사업 추진

40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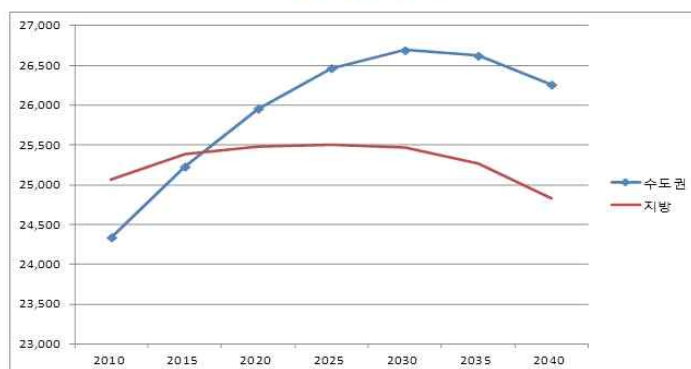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역 위기 징후 1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존립 위기

####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감소

우리나라 장래 인구 예측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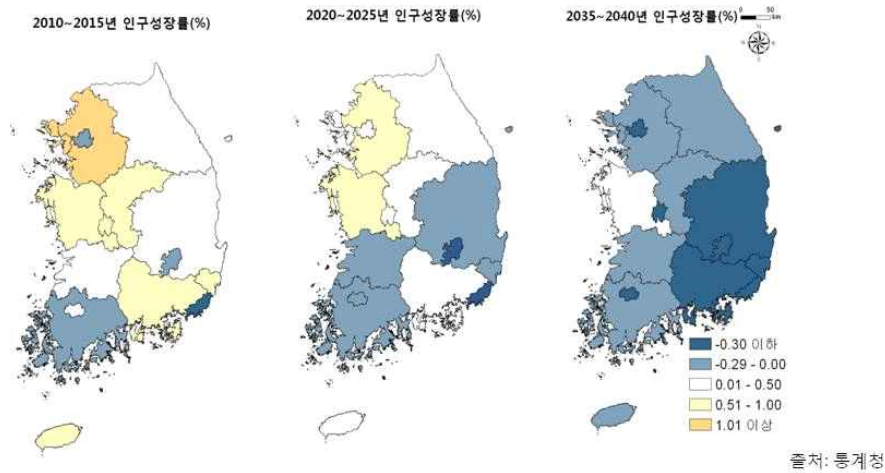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역 위기 징후 1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존립 위기

##### 시도별 장래 인구 성장률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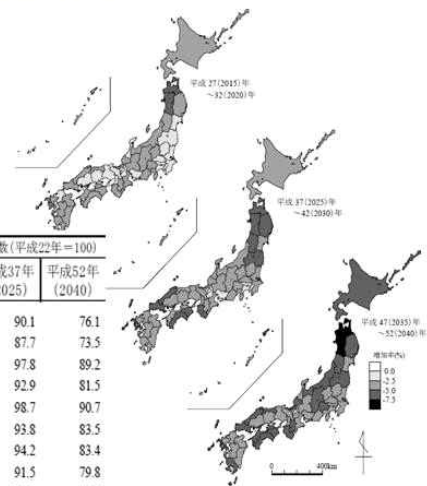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역 위기 징후 1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존립 위기

##### 일본의 지역별 장래 인구 추정

ブロック	總人口(1,000人)							指数(平成22年=100)	
	平成22年 (2010)	平成27年 (2015)	平成32年 (2020)	平成37年 (2025)	平成42年 (2030)	平成47年 (2035)	平成52年 (2040)	平成37年 (2025)	平成52年 (2040)
北海道	5,506	5,361	5,178	4,960	4,719	4,462	4,190	90.1	76.1
東北	9,336	8,929	8,607	8,191	7,759	7,319	6,863	87.7	73.5
関東	42,604	42,763	42,392	41,656	40,640	39,406	38,010	97.8	89.2
北関東	6,986	6,867	6,699	6,489	6,248	5,982	5,696	92.9	81.5
南関東	35,619	35,896	35,693	35,166	34,392	33,424	32,314	98.7	90.7
中部	21,716	21,430	20,973	20,375	19,686	18,931	18,125	93.8	83.5
近畿	22,758	22,528	22,072	21,440	20,692	19,862	18,983	94.2	83.4
中国	7,563	7,392	7,175	6,917	6,638	6,342	6,034	91.5	79.8
四国	3,977	3,838	3,683	3,510	3,331	3,146	2,955	88.3	74.3
九州・沖縄	14,597	14,357	14,021	13,610	13,152	12,656	12,115	93.2	83.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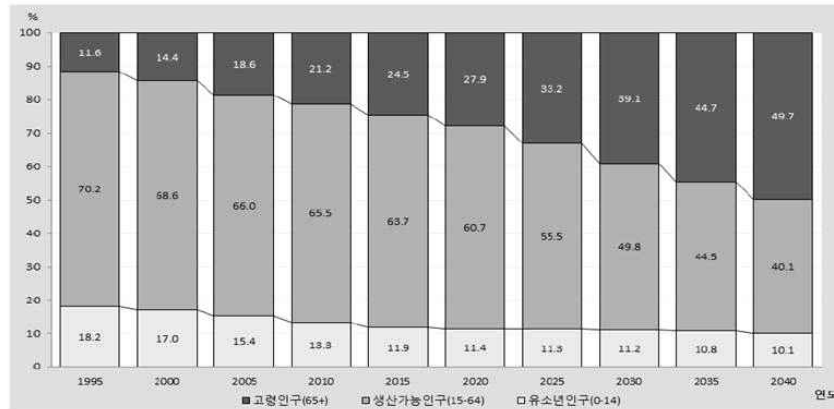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역 위기 징후 1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존립 위기

##### 농촌 지역의 고령화심각

우리나라 군 지역 인구 연령별 구성 추계



출처: 박지현 2015

45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역 위기 징후 1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존립 위기

##### 농촌 마을 존립의 위기

충청남도 마을 인구 규모와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명 미만	20~40 명	40~60 명	60~80 명	80~100 명	100~ 200명	200~ 300명	300~ 400명	400~ 500명	500~ 1000명	1,000명 이상	전체
20% 미만	45 0.8	6 0.1	4 0.1	6 0.1	8 0.1	85 1.5	131 2.4	113 2.0	133 2.4	559 10.1	419 7.6	1,509 27.2
20~40	13 0.2	27 0.5	110 2.0	181 3.3	241 4.3	1210 21.8	400 7.2	139 2.5	54 1.0	74 1.3	6 0.1	2,455 44.3
40~60	6 0.1	64 1.2	198 3.6	271 4.9	286 5.2	610 11.0	55 1.0	12 0.2	1 0.0	- 0.0	- 0.0	1,503 27.1
60~80	- -	6 0.1	21 0.4	23 0.4	12 0.2	6 0.1	5 0.1	3 0.1	- -	- -	- -	76 1.4
전체	64 1.2	103 1.9	333 6.0	481 8.7	547 9.9	1911 34.5	591 10.7	267 4.8	188 3.4	633 11.4	425 7.6	5,543 100.0

출처: 충남발전연구원

46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역 위기 징후 2 : 지방 재정 위기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 증가: 지방세 수입보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더 크게 증가



출처: 주만수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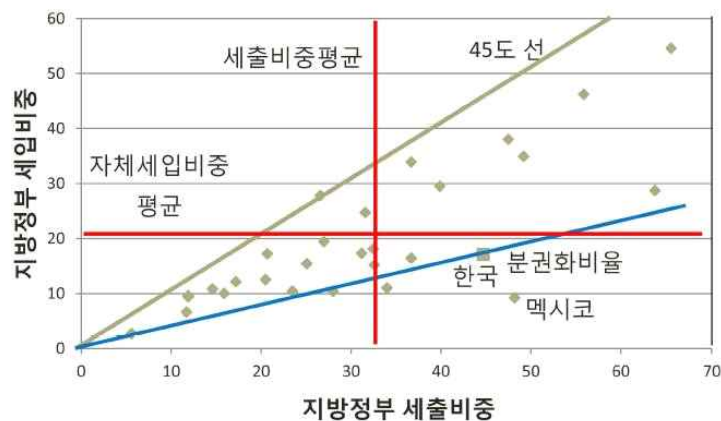
47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역 위기 징후 2 : 지방 재정 위기

OECD 최저 수준의 낮은 지방재정 분권화 비율 (자체세입/세출비중)



출처: 주만수 2014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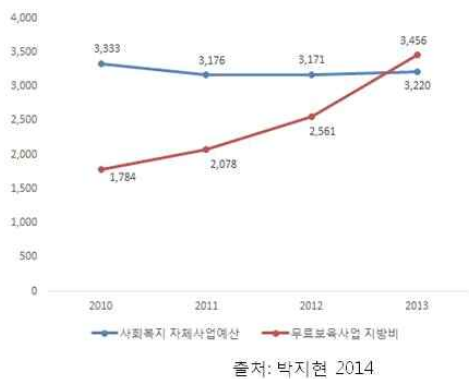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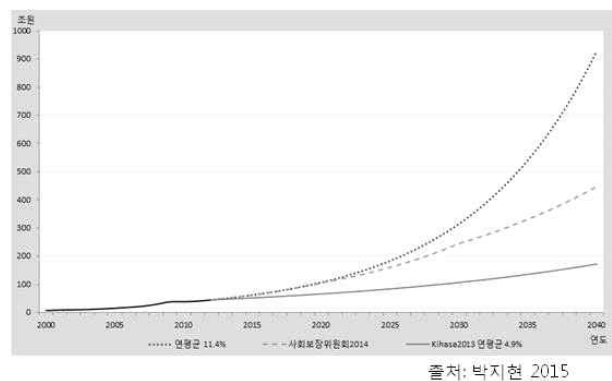
#### 지역 위기 징후 2 : 지방 재정 위기

##### 급증하는 지방재정 사회복지 지출

##### 사회복지 지방 자체사업과 무료보육사업



##### 장래 사회복지 지출 추계



49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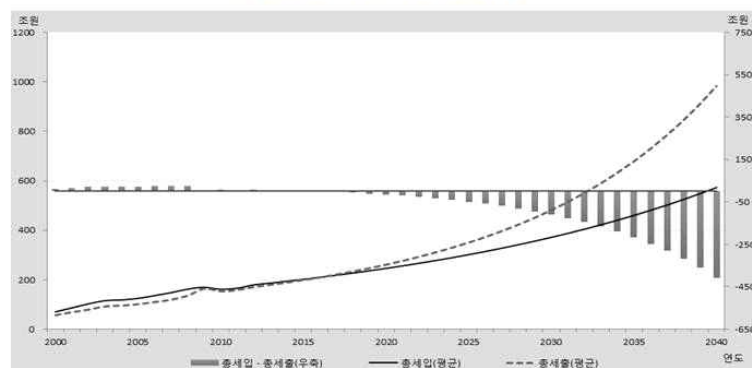
3

#### 지역 위기 징후 2 : 지방 재정 위기

#####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방재정

: 현재 지방재정 구조로는 장래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음

#####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전망



50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 □ 3 □ □ □ □

#### 지역 위기 징후 3 : 주민 안전 위기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 시설 낙후지역 집중 : 공간-환경 측면의 부정의(不正義)  
( 군사시설, 원자력/화력발전소, 송전탑, 댐, 환경위해시설, 공해업소 등 )



보령 공군사격장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당진 송전탑

51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 □ 3 □ □ □ □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의 필요성

-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  
202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도성장시대 개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유효성 상실
- 복지 수요 확대와 재정 위기:  
노령화로 인한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위기  
복지지출 확대로 균형발전재원 투입 곤란
- 기후환경 위기 및 오일피크, 일본원전 사고, 범지구적 탄소 배출 규제  
현재 탄소배출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  
신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

52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의 필요성

##### -수도권 인구 과반시대:

수도권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 필요  
수도권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성 인정

##### -세종시 출범, 충청권 인구 및 산업 성장:

충청권도 수도권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영호남 지역에서 확산  
영호남 지역과 공조 필요

##### -경제의 세계화와 사회 공간적 양극화 심화:

세계화로 인해 국가 정책의 실효성 감소  
사회계층간 격차와 지역간 격차 심화

53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새로운 문제 의식

##### Ⅰ 정의롭지 못한 국토 공간구조

-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역주민의 삶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 독점**  
(예: 물 자치권 부재로 댐과 방조제 등 물관리시설 운영이 중앙에 집중, 밀양송전탑 갈등 등)
- 편익시설은 인구가 많은 발전 지역에, **혐오시설은 인구가 적은 낙후 지역에 집중**
- 발전 지역의 자원과 생산물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데 반해 **저발전 지역은 시장가격 미반영**

##### Ⅱ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토 공간구조

- 인구적 측면**: 인구감소시대에 인구역외 유출로 지역사회 존립이 어려운 지역 다수 발생
- 경제적 측면**: 다극 성장거점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위기시 안정성 및 복원력 담보
- 사회적 측면**: 지나친 지역격차는 지역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 저해(EU는 역외통합정책)
- 생태환경적 측면**: 생태수용력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시설의 집중 및 보상 미비

54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정당화했던 담론

##### - 1970년대 안보 불안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휴전선에 가까운 수도권의 집중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문제  
→ 박정희 시대 행정수도 건설 추진

##### -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집적불경제 발생

과밀에 의한 지가상승,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집적불경제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 → 수도권에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 규제

##### - 국민통합 및 헌법정신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국민으로서 평등한 삶의 기회를 누려야 함

55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I 지속가능 담론

-현재 우리나라 국토 구조는 인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인구적 측면: 지역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구의 확보

-경제적 측면: 성장동력의 지역별 다극화

-사회적 측면: 계층간, 지역간 격차 해소를 양극화 완화 및 사회 통합

-환경적 측면: 생태수용력 범위 내에서의 개발로 환경과 개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 담보

-리스크 관리: 일극집중구조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시 대응력, 복원력에서 결정적 취약

56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 정책의 상호보완성

	효율성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 정책	지속 성장	경제 개혁이 형평성을 증대	녹색 성장이 지속가능성 향상
사회 정책	사회정책이 효율성을 증대	사회 통합	환경적으로 지속가 능한 사회정책
환경 정책	녹색 경제가 혁신을 촉진	사회정책이 포용성을 강화	지속가능한 환경

출처: OECD 2011

57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3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I 정의(正義:Justice) 담론

- 모든 지역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면서 동시에 낙후 지역과 낙후 지역주민에게 최대 편익이 배분되어야 함 (존 롤스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
- 국가 전체의 편익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규제가 필요 (존 롤스 정의론의 자유 제한 원칙)
- 다른 지역의 편익을 위한 특정 지역의 손실에 적절한 보상 (생태계 서비스 보상 등)
- 공간 정의, 환경 정의, 물 정의, 에너지 정의 등 정의 담론을 균형발전 각 영역과 정책에 적용

58



###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 I 권리 (자치 분권, 주민 주권) 담론

- 물, 바람, 전기 등 지역 부존 자원과 지역 생산 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권 강화  
행정 분권을 넘어서 에너지 분권, 물관리 분권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의 분권 필요
- 중앙집중형 에너지/수자원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수자원 공급 체계로 전환 유도
- 중앙정부 집행기관의 해체와 권한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분권  
예) 한국전력 → 지방에너지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지역농촌회의소,  
수자원공사 → 각 수계별 광역수자원청 등

##### I 복지 국가 담론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사람 중심, 행복 중심 의제를 우선해야 함.
- 21세기 분권형 복지국가: 전국적 National Minimum 보장 토대 위에,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의 차별화  
현금 복지는 중앙정부가, 현물 복지 및 복지전달체계는 지방정부가 책임

59

#### 4.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과제

## 4.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과제



### I 지방분권

####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전환

-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원과 인력의 동시 이양
- 지방정부의 자율적 자원 확대 (중앙정부 국세와 지방정부 지방세의 세입 8:2 구조 개혁)
- 경찰 자치, 교육 자치, 물 자치, 에너지 자치 등 각 영역에서 지방 자치 확대

### II 통합적 거버넌스와 추진 체계

#### 부문별 (sectoral) 접근에서 장소 기반 (place-based) 접근으로 전환

- 각 부문별 정책이 지역 내에서 연계 조정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 기초 지방정부의 통합적 조정 역할 강화
- 기업과 대학, 주민 등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61

## 4.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과제



### I 지역간상생 협력

#### 중앙정부 재원을 둘러싼 지역간 경쟁에서, 지방 분권에 기초한 지역간 협력으로 전환

- 지방 분권이 전제되어야 권한을 가진 지역간 협력이 원활해 짐
-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 간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
- 지역간 특화 발전을 통한 지역간 협력적 분업 강화

### II 균형발전 사업의 효과 증대

#### 예산 낭비적 사업 추진 대신,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효율적, 효과적 사업 추진

-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 대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 물리적 가시적 사업 대신,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추진
- 선 지역 역량 강화, 후 예산 투여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
- 사업의 구체적 목표 제시 및 엄정한 성과 평가

62

## 4.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과제



### Ⅰ 선(先) 지방 육성, 후(後)수도권 규제 완화 원칙 고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대신, 지역간 상생 협력으로 전환

- 수도권 관리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
- 수도권 차원의 성장관리 체계 구축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협력 사업 발굴 추진

### Ⅱ 세종시,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수

물리적 도시 건설에서,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발전

- 단순한 수도권 기능 이전을 넘어서, 지역의 혁신과 성장 동력 역할 수행
- 국토 차원에서 다극 거점 역할 수행
- 인근 지역과의 상생 협력

63

##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 □ □ □ 5 □ □ □ □ □

### ■ 기존 균형발전 목표

인구의 불균형	➡	인구의 균형
제조업 입지와 SOC 의 불균형	➡	제조업 입지와 SOC 의 균형
생산과 GRDP 의 불균형	➡	생산과 GRDP 의 균형

### ■ 새롭게 추가될 균형발전 목표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	➡	권력과 기회의 균형
소득과 일자리의 불균형	➡	소득과 일자리의 균형
복지와 안전의 불균형	➡	복지와 안전의 균형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	➡	편익과 비용의 균형
환경보전과 개발의 불균형	➡	보전과 개발의 균형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불균형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

65

##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 □ □ □ 5 □ □ □ □ □

### Ⅰ 공간 규모에 따른 다차원 공간의 균형발전 추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을 넘어서, 초광역, 광역, 기초 등 다차원 공간의 균형발전 추구

#### 다차원 공간별 균형발전 목표

구분	주요 영역	목표	가치와 원리
국가 단위	외교, 국방, 국가경제, 현금복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지 국가	모든 국민의 삶의 기회 균등
광역자치단위 (인근 시도를 통합한 중형권 등 인구 500만 수준)	지역경제, 지역산업	지역간 균등한 성장동력 배분, 지역의 자립적 생산시스템 및 선순환 경제, 산업생태계 육성	광역경제 단위의 경제적 측면의 균형
기초자치단위 (시/군 단위)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주민들의 균등한 삶의 질 수준 보장	기초자치단위의 삶의 질 균형
주민자치단위 (읍/면/동, 마을/동네 단위)	주민자치 및 학습, 공동체 유지 및 복지전달	풀뿌리 민주주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 주민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
환경 생태권 (수계, 생물생태계, 대기오염권 등)	환경 생태	환경보전 및 환경정의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

66

##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I 지역발전 수준에 따른 지역 차등지원 제도

객관적 지표를 통해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중앙정부의 차등 지원

- 지방 분권이 전제되어야 권한을 가진 지역간 협력이 원활해 짐
-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 간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
- 지역간 특화 발전을 통한 지역간 협력적 분업 강화

### I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방식 전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 개발 중심의 지역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시대착오적 각종 개발 관련 특별법 개정, 폐지
- 선 구역 지정, 후 기업 유치 방식에서 선 기업 유치, 후 입지 지원 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 신규개발 방식에서 소규모 지역재생 방식으로 전환

67

##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I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유도

지역의 분공장 경제화를 막기 위해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가칭 '법인 본사 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세제, 자금 인센티브 제공 (박경, 2014)
- 외부 소재 본사를 통한 지역의 영업 잉여 유출을 방지

### I 지역 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력 채용장려 강화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고교-지역 대학-지역 기업의 인재 선순환 도모

- 지역 기업에서 지역 인재 채용 일정 비율 의무화 및 지원 제도 도입
-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입지 지원 중심에서 고용 지원 중심으로 전환
- 지역 고교 및 대학과 지역 기업의 협력 관계 촉진 지원

68

##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Ⅰ 지역 환경과 지역 자원에 대한 지역 통제권 강화

지역 환경과 지역 자원의 관리 통제 권한을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에게 부여하여 환경 보존 및 지역 자원 이용 효율성 강화

- 지역 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 신재생에너지 공사 설립,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 지역단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 Ⅰ 각종 중앙정부 산하 개발 공사분권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산하 개발 공사를 지역 공사로 분권화

- 에너지, 수자원, 농업 개발 등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공사가 분권화 대상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와 지역의 에너지, 수자원, 주택과 토지 등을 직접 통제하도록 함

69

##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 Ⅰ 지역별 혐오시설 총량제 도입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이 일정 총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 혐오 시설 배치 유도

- NIMBY 현상과 PIMFY 현상을 낚는 지역별 편익과 비용의 불공정한 배분 방지 (미국 뉴욕시 공공시설 공공 입지제도 참조)

### Ⅰ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도 도입

보전된 생태계가 제공해 주는 각종 효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

- 생태계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식과 평가
-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70

## 6. 맺음말

## 6. 맺음말



###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운영

#### ➤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분권화

중앙정부에 의한 시혜적 차원의 균형정책이 아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필요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통합 추진이 필요

#### ➤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행정 분권을 넘어서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균형발전을 촉진  
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의 통합 추진이 필요

#### ➤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암묵적 정책에 대한 제어

명시적 균형발전 정책과 암묵적 균형발전 정책의 통합 추진이 필요  
경제산업정책, 교육정책, 언론정책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제어

## 6. 맺음말



###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주체적 역량 배양

- 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기획과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지지 및 추진 주체가 필요
-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이를 실천하는 지역 주체들의 연대

### 슬로건과 구호 중심의 정책에서,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

- 그동안 추진되었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반성, 이를 통한 기존 정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선이 필요
- 개별 정책, 개별 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기획 및 집행의 오랜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현장 단위 개혁 역량의 확보 및 육성이 급선무
- 결국 일은 사람이 하므로, 지역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꾸준히 육성하여야 함.

73

## 6. 맺음말



### 충청남도의 신균형발전 정책 제안 (2014.3)

-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 생태계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74



# 감사합니다

---

75

##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 용역

- 발표1 : 총괄 부문/관광시설·투자 부문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2 : 공장·기업 부문/지역개발 부문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표3 : 대학 부문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1982년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마련된 이후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수도권-비수도권간 경제적·사회적 격차 확대 및 효율성 저하 초래
- 최근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직·간접적으로 추진 움직임을 나타냄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시성 있는 논리 마련과 대응 필요

#### ◦ 연구의 목적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4개 부문으로 대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증적인 영향관계 도출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불합리성과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 대응
-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 방안 모색

#### 연구의 배경

-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마련된 이후 수도권 집중도 여전히 심각, 이른 사회·경제 전반에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함
- 최근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함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논리 마련과 대응 필요

#### 연구의 목적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4개 부문으로 대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증적인 영향관계 도출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불합리성과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 마련
- 비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①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모두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
- 시간적 범위
  -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로 한정
- 영향분석 범위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4개 부문으로 대별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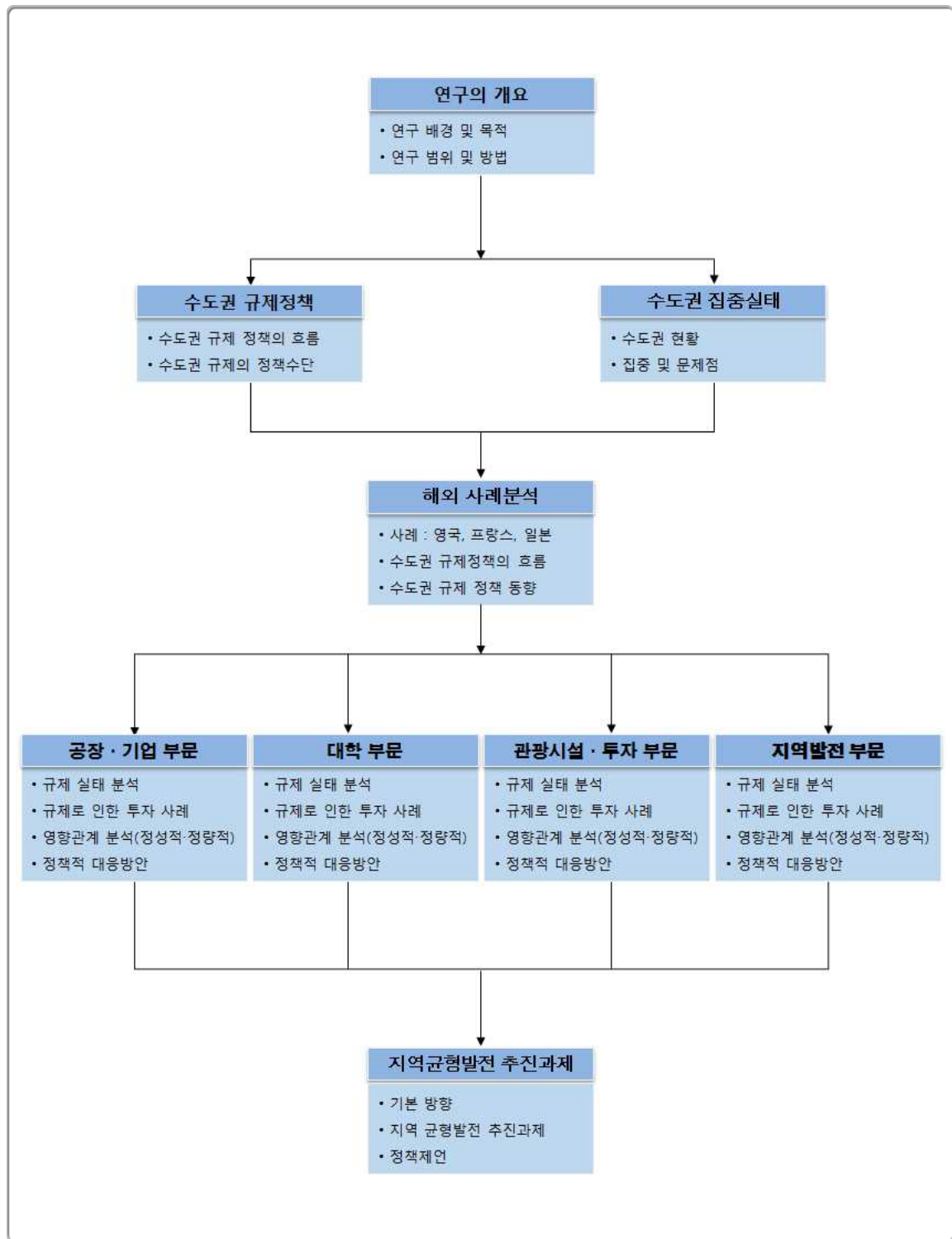
<주요 영향분석 범위>

	주요내용
공장·기업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관련 법령, 기업유치 지원 등
대학 부문	- 수도권 대학 신·증설, 이전 등 규제완화,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등
관광시설·투자 부문	- 수도권 관광당지·시설, 관광개발사업 민·외자 투자유치 등
지역개발 부문	- 수도권 신도시 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 ② 연구의 방법

- 정성적 영향 분석
  - 보도자료, 연구자료, (언론)기사, 1:1면담, 설문조사 등 문헌자료 이용
- 정량적 영향 분석
  - 산업연관분석 모형 또는 지역발전위원회(2014)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영향관계 파악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도출
- 수도권 규제완화로 투자규모가 감소하는 비율을 시나리오별(100%, 80%, 60%)로 적용하여 파급효과 분석

### 3. 연구 수행체계도



<그림 I -1> 연구 수행체계도

## Ⅱ 수도권 규제 개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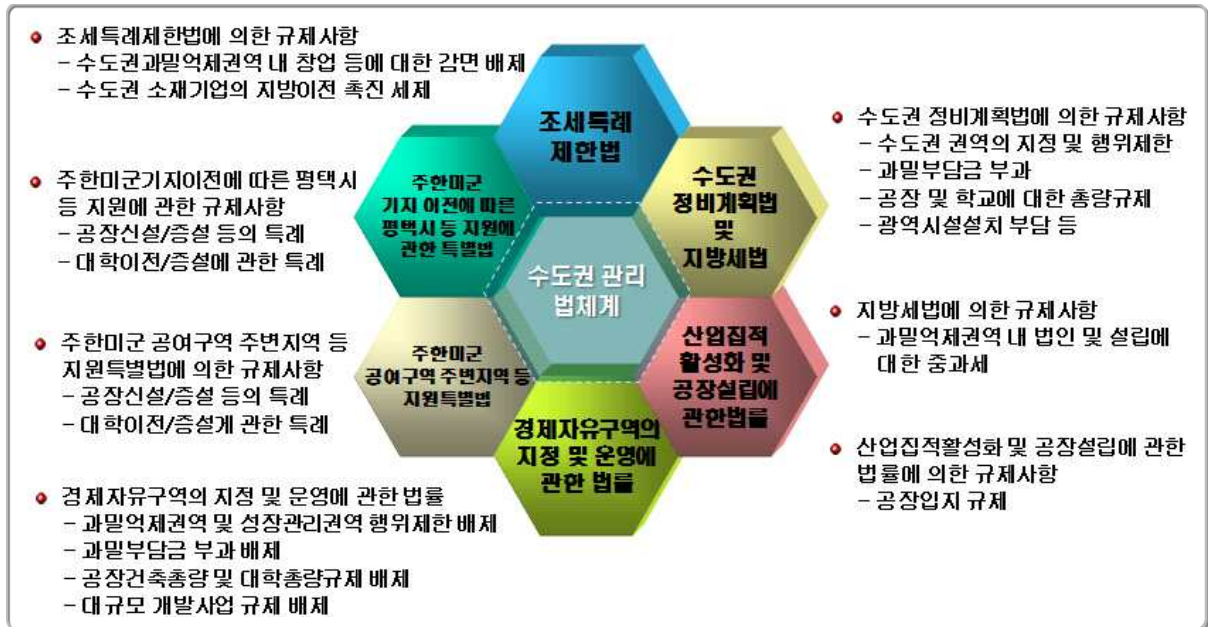
### 1. 수도권 규제 정책의 흐름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주택난, 교통난 등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 '82년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되, 지방을 발전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 시행
  - 노무현 정부는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정책 추진
  - 수도권 분산 정책을 우선시 하였으나, 일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함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적극 대응,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 시행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08.10.30)” 발표로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해제를 시행함
-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우회적 시행을 위해 투자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간접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시행
  -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통해 경기위기 극복을 추진하고자 함
  -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관련 분야 별로 규제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함
  - 투자활성화 대책(1차~7차) 과제의 30.5%(139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 연관

## 2. 수도권 규제의 정책수단

### ① 법·제도적 규제 정책

■ 수도권규제 관련 법률은 수도권규제 법률(3)과 수도권규제 특례(3)로 대별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개별시설 신·증설 규제 : 입지규제수단

■ 입지규제수단은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총량제, 공원지역지정제한, 용도지역별 공장신증설 규제, 대학정원제 등 5가지로 구분됨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시 해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4조
- 공장총량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1조~제23조
- 공업지역지정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용도지역별 공장신증설 규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학정원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4조

### 3. 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 ① 정부 및 국회

##### ▣ 정부

-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153건을 검토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4건’ 추가논의 필요 항목으로 분류('14.12.28)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논의 필요항목(4건)>

구분	주요 분야
건의 1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건의 2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건의 3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건의 4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경제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 정부

- 현재까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9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중 4건은 수도권규제 강화, 5건은 수도권규제 완화 취지의 법률안임
- 수도권 규제 강화 법안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지위 격상,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참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등 지역 간 형평성 및 지역균형발전의 위한 주도적 참여를 중심으로 법률안 발의
-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공업지역의 면적 중복지정 허용, 공공청사 신설 허용 등 수도권 내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중심으로 법률안 발의



## ② 수도권 지자체

### ▣ 경기도

- 경기도는 규제개선 분야부문에 100대 과제(기업규제 60건, 민생규제 40건) 선정('15.01.11)

### ▣ 인천시

- 인천시는 '2015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규제개혁 관련 총 27건(중앙규제 23건, 자체규제 4건)의 과제 논의('15.03.24)

## ③ 경제단체

-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5건 건의함(2014. 7)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5건)>

구분	주요내용
건의 1	수도권 공장총량제폐지
건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건의 3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건의 4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제한 완화
건의 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 ▣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 놓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3.3조원' 보도자료 발표(2015. 6)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 놓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3.3조원'>

구분	주요내용
주장 1	- 6년간 수도권규제 등 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함
주장 2	-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6배 - 연구결과 지난 6년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Inward FDI, 469억 8,000만 불) 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Outward FDI, 1,227억 5,600만 불)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④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논리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수도권 집중의 수준과 원인',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및 영향', '국가 경쟁력의 대한 영향', '국토 균형발전 효과', '국제적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를 중심으로 의견차를 보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논리>

	찬성 논리	반대 논리
수도권 집중의 수준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규제 완화 추세</li> <li>· 세계적 도시들은 메가시티 전략으로 국제 도시경쟁력 제고에 전력, 수도권 규제는 시대조류에 역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 완화는 면적 지방발전 인프라 구축 후 검토 필요, 아직은 시기상조</li> <li>-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은 SOC 투자 집중으로 연계</li> <li>· 수도권의 ㎢당 SOC스톡은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3배에서 많게는 6배로 SOC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li> </ul>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부작용</li> <li>· 입지규제 외에도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공장 신 증설 애로</li> <li>- 낙후지역 역차별</li> <li>· 경기도의 경우 사실상 비수도권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도 권역구분에 따라 규제 대상</li> <li>-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업 외에 지방기업 인접부지 증설시 시너지효과가 많음</li> <li>- 규제 효과 불분명</li> <li>· 30년 이상 지속된 수도권규제의 정책효과는 불확실함</li> <li>·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수도권규제가 적절하지 재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확대와 사회적 비용발생 등 전반적 효율성 저하 초래</li> <li>· 수도권 지역은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교통·주택·환경오염 등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li> <li>-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균형발전 저해, 지방산업 위축</li> <li>·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의 기업투자가 약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li> <li>-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를 블랙홀처럼 흡수 예상</li> <li>· 지역 이전기업의 U-turn 가능성 커짐</li> </ul>
국가 경쟁력의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투자 대신 해외진출 또는 투자포기</li> <li>· 수도권 내 투자를 계획했으나 규제로 인해 해외에 투자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 형성, 국토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li> <li>· 수도권은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를 겪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하여 도시 활력 저하로 공동화 심화</li> </ul>
국토 균형발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정부시 결정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전이 완료→ 수도권 완화 적정시기</li> <li>- 특정지역의 성장억제 보다 자생적 성장유도 및 낙후지역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이전한 많은 기업들이 도리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li> <li>·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2.7%, 상장사 자본 82%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li> </ul>
국제적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전개</li> <li>· 일보, 영국, 프랑스 등은 '8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폐지함</li> <li>- 글로벌 개방경제에서 '규제의 풍선효과'는 없음, 기업환경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선호</li> <li>- 수도권 산업공동화, 기업의 적기투자 저해 등 경제 악영향,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과 병행하여 지역 대 상 균형발전 정책 시행</li> <li>· 일본의 경우 지방을 대상으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li> </ul>

주 : 양금승(2015. 6,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 ⑤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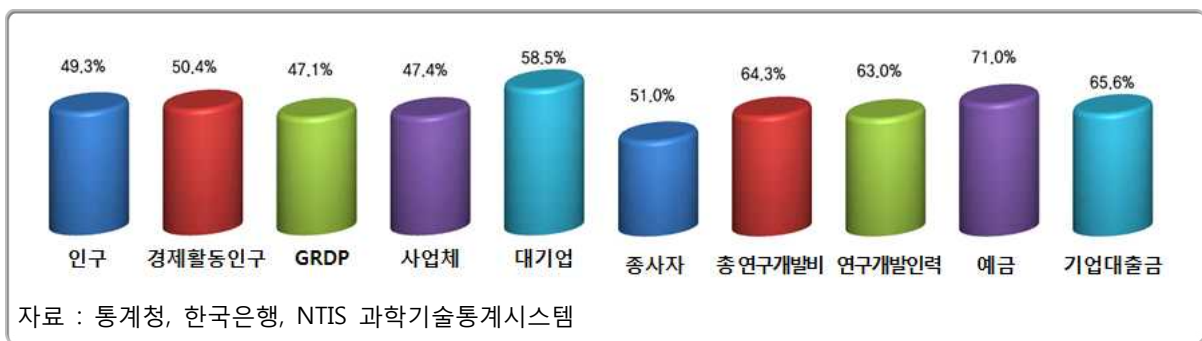
- 첫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단순히 수도권 규제완화 시 발생하는 집적의 경제효과만 강조
  - 수도권의 집적의 경제효과와 과밀의 불경제효과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 연구 필요
-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에 대한 분석 필요
  - 규제에 순응한 선량한 경제주체(예: 그린벨트 내 농민)로부터 규제 완화를 기대하여 규제 지역에 선투자한 경제주체(예: 일부 부동산개발업자)에게로 부의 이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할 경우 투기적 토지거래의 발생이 예상되며, 향후 규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우수한 사람(정치·경제·행정적 의사결정권자)이나 집단(기업, 언론사)이 이익을 보게 됨
  - 주요 언론사들은 수도권 편향적인 보도와 논평을 내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경시됨
- 넷째, 현행 국비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수도권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기대 편익의 크기를 좌우하는 면적 당 인구와 시장 수요규모 측면에서 수도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음
  - 따라서 동일한 투자 사업에 대해 수도권의 편익-비용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
- 다섯째, 수도권의 기업입지 선호 요인에 관한 검증이 요구됨
  - 수도권은 ‘고급 인적자원의 확보 용이성’, ‘국제화의 용이성’, ‘중앙행정부처와의 교섭 용이성’ 정도를 제외하면 수도권 입지의 근거가 빈약함
  -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관 또는 기업의 입지선호 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

## 4. 수도권 집중실태와 문제점

### ① 수도권 현황

#### ■ 수도권 집중도

- 2012년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3%, 경제활동인구의 50.4%, GRDP의 47.1% 등이 집중됨



<주요 지표별 수도권 집중 현황>

### ②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 집중·문제점

-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 형성, 국토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확대와 사회적 비용발생 등 전반적 효율성 저하 초래
-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단기적인 경제·산업 정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상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확대는 지역의 소외감 및 상실감을 확산시킬 것이고, 지역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사회 전반적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 III

## 해외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분석

### 1. 영국

####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 영국의 수도권 정책은 발로우보고서(1940년)에서부터 출발됨
- 영국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과도기, 규제 완화기의 4단계로 대별됨

#### <영국의 수도권 규제정책 변천과정>

	수도권 규제 정책	주요내용
도입기 (1940년대)	'공장개설허가제' (IDC, Industrial Development Certificates)	- 공장개설허가제는 1945년 「공업배치법」과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서 근거한 제도임 - 런던과 그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은 건축면적이 465㎡를 초과하는 경우, 상무성의 공장개설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규제 강화기 (1960년대)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 (ODP, Office Development Permits)	-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는 196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임 - 규제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도기 (1970년대)	'공장개설허가제(IDC)' +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ODP)'	- 공장개설허가제는 점차 완화됨: 465㎡(당초)→1,162㎡('76)→4,645㎡('79) -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는 규제대상 지역이 축소되고, 기준면적도 상향조정됨 : 279㎡(1965년) → 2,790㎡(1977년)
규제 완화기 (1980년대~현재)	IDC, ODP는 대처정부에 의해 1982년 완전 폐지	- 영국정부는 1970년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지원받을 만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됨

####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 영국은 1990년대 이후 기성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를 부흥 시키려는 '도시재생(Regeneration) 정책'을 적극 추진
- 영국의 도시재생은 정권(보수당·노동당)의 성향에 따라 도시재생 추진기구 및 보조금지원제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정권별 도시재생 추진기구 및 보조금 지원제도>

구분	도시재생 추진기구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제도
보수당 정부 (1979~1996)	- 도시개발공사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UDC) - 잉글리쉬파트너십 (English Partnership : EP)	- 도시개발보조금(Urban Development Grant : UDG) - 시티챌린지(City Challenge : CC) -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 SRB)
노동당 정부 (1997~2010)	-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 - 도시재생회사 (Urban Regeneration Company : URC)	- 커뮤니티 뉴딜기금(New Deal for Community : NDC) - 근린지역 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 NRF) - 통합예산(Single Budget : SB)

## 2. 프랑스

###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일드 프랑스(Il-de France)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
- 프랑스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과도기, 규제 완화기의 4단계로 대별됨

<프랑스의 수도권 규제정책 변천과정>

	수도권 규제 정책	주요내용
도입기 (1950년대)	‘공장설립허가제’ (Agrement, 아그레망)	- 공장설립허가제는 공장설립 허가 시 중앙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 파리에 입지해야 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분산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규제 강화기 (1960년대)	‘과밀부담금제’ (Redevance, 르데방스)	- 과밀부담금제는 파리시와 그 주변의 과밀지역에 입지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신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과도기 (1970년대)	해당사항 없음	- 파리지역의 개발 억제를 통해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 - 이는 파리의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 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됨
규제 완화기 (1980년대~현재)	과밀부담금제 변경 (1982년)	- 과밀부담금제의 대상에서 공장을 제외하고, 현재는 사무실만 대상으로 함
	공장설립허가제 폐지 (1985년)	- 파리 중심만 제외하고 폐지
	수도권 전략의 전환 (파리권 위상강화, 2004년)	- 파리권 지역의 경쟁력을 유럽 대도시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전략을 전환 - 수도권규제를 국토정책투자조정기관(DATAR)의 정책목표에서 배제

###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 프랑스에서는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2000. 12)」(Loi relative a la solidarite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이하, 「SRU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
- 프랑스는 SRU법을 제정하고 SCOT(국토일관성계획), PLU(도시지역 계획), ZAC(협의정비지구)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

### 3. 일본

####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 일본의 동경권은 정치·경제의 중심지로서 195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인구증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생활환경의 악화 등 도시기능의 악영향을 초래함
- 일본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과도기, 규제 완화기의 4단계로 대별됨

<일본의 수도권 규제정책 변천과정>

	수도권 규제 정책	주요내용
도입기 (1950년대)	'수도권정비법'	-수도권정비법(1958)은 동경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구역을 수도권으로 지정·관리함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1959)는 '수도권 공장 설립 허가제'를 통해 공장 신·증설 시 허가를 받도록 함
규제 강화기 (1960~70년대)	'강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강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은 작업장 면적 500㎡ 이상의 모든 공장에 대한 개설허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
	'공업재배치 촉진법'	-공업재배치 촉진법(1972)은 과밀공업지역에서 공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유도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유도지역 내 활발한 신·증설 환경 조성을 유도함
과도기 (1980년대 말~90년대)	'다극분산형 국토조성 촉진법'	-공업이 대도시 내부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효과가 재평가되면서 적극적인 수도권 공업활성화정책을 추진함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87)은 국제화와 세계 도시기능의 재편성을 기본과제의 하나로 채택, 대도시권 성장억제책 폐기
규제 완화기 (1990년대 말~현재)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수도권정책의 초점이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재편'으로 전환됨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강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공업재배치 촉진법'	-수도권 규제 관련 제도의 폐지

####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 일본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정책'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지방)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 추진
- 현재 일본 정부는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 3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등 제도 및 관련 기구의 제정·설치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4. 시사점

- 첫째,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지난 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고,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있음
  - 수도권정책은 대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정책 및 사업 기획 등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
  -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둘째,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더라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수도권규제 완화와 함께 중심시가지 활성화정책, 도시재생정책 등을 병행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정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
- 셋째,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발전을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자립경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구(RDA)」, 「중심시가지활성화법」, 「SRU(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법」 등을 설치·제정하여 지방 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
- 넷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개국은 세계 메가시티(megacity)와의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자국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에 둠
    - 영국의 경우 런던지역의 인구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도시로서의 런던이 가져야할 역할 제고에 중점을 둠
    - 프랑스의 경우 일드 프랑스 지역의 입지규제를 폐지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Grand Paris Plan(신도시 지구 개발 계획)을 추진함

## ① 공장·기업 부문

### 1. 규제 실태 분석

####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산업단지의 입지 관련된 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의 집적의 활성화를 위한 공장 및 산업단지의 용도지역별 조성사업 규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규제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기술과 산업을 집적시켜 기술개발과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연구소와 산업단지 입지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현상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공장총량과 공장건축연적을 규제

#### ② 공장 기업부분 규제관련 현황

- 투자활성화 대책
- 1차 투자활성화 대책('13.05.01): 현장대기 프로젝트, 행정절차 개선, 중소기업 지원
- 2차 투자활성화 대책('13.07.11): 현장대기 프로젝트, 입지규제 개선, 융복합 촉진
- 3차 투자활성화 대책('13.09.25): 현장대기 프로젝트, 환경규제 개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4차 투자활성화 대책('13.12.13): 현장대기 프로젝트,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지자체 규제개선
- 5차 투자활성화 대책('14.03.12): 지역주도 발전전략,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 6차 투자활성화 대책('14.08.12):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7차 투자활성화 대책('15.01.19): 현장대기 프로젝트, 핵심관광 인프라 확충, 혁신기업 입지확대, 기술금융 및 벤처 투자 활성화

◦ 산업단지 현황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수가 1,082개로 수도권은 135개(전국 대비12.5%)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면적은 전국적으로 1,376,958천㎡ 수도권은 283,426천㎡(전국 대비20.58%)의 면적을 사용
- 가동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73,744개로 수도권은 31,789개(전국 대비 43.1%)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전국적으로 2,076,162명 수도권 673,654명(전국 대비 32.4%)로 나타남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입지제한 현황

- 공장설립 입지제한 지역은 총 11곳으로서 경기(1), 강원(1), 경북(3), 경남(1), 전남(5) 지역임
- 이중, 강원도 화천군은 79개 업종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② 주요 문제점

◦ 공장총량제의 완화

- 공장총량제는 공장입지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매 3년간 수도권의 공장건축총량을 설정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근거)

<수도권 공장총량표

	연도	수도권	서울시	인천	경기도
허용량	2015-2017	5,778	33	962	4,783
	2012-2014	5,536	36	1,000	4,500
	2009-2011	9,564	229	949	8,386
	2006-2008	12,245	608	898	10,739
산단 이외 공업지역	2012-2014	2,214	24	750	1,350
	2009-2011	2,470	198	595	1,677
	2006-2008	4,622	596	804	3,222
개별입지	2012-2014	3,412	12	250	3,150
	2009-2011	7,094	31	354	6,709
	2006-2008	7,623	12	94	7,517

: 지역균형발전협약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연구, 2014 p.149

◦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 국토교통부는 15. 5. 6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 을 발표
- 30m<sup>2</sup> 이하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 내의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의 20%까지 증축이 가능
- GB 해제 총량의 전국 지자체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532km<sup>2</sup>로 그중 42%(97.9 km<sup>2</sup>)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기업의 수도권 유턴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 논의 4대 과제

- 국무조정실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4건을 ‘추가 논의 필요’ 항목으로 분류

<전국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내용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 항만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하는 방안 - 인천공항 물류단지(56만1천m <sup>2</sup> )의 용도변경을 위해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방안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총량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면적 규제완화 - 개별입지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량총량제' 적용 배제	-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공장청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현상 가속화

- GB해제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연되던 수도권지역 개발계획이 정부의 규제완화로 사업 진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개발만 가속화하고 투자를 집중하는 촉매제
- GB해제 총량의 4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현실적으로도 수도권은 개발 수요가 많고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 그린벨트 해제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GB규제완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부지 마련과 사업을 위한 사전단 계이며 20만m<sup>2</sup>미만 GB내 중소형 임대주택 단지 조성 가능해짐

## 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 ① 비수도권의 공장·기업 피해사례

- 비수도권의 공장·기업 피해사례 피해 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산단 건폐율 기준 완화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 기업 이전 및 유치에 어려움에 처해 있음

<비수도권의 공장·기업 피해사례 피해 사례>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내용
충남 천안 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	- 충남 천안과 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가 급감 · 천안시의 경우 09년(57개), 2013년(1개) · 아산시의 경우 2011년(10개), 2014년(1개) - 천안시는 일반기업의 투자유치도 감소추세	수도권 규제	-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 -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조성 - 공장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충청	수도권 기업 이전	- 2011년부터 45만 7634㎡에 국비와 민자 등 677억 1900만원을 들어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에 금속가공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20~30개 업체를 입주시킬 방침	수도권 규제	- 산단 건폐율 기준 완화 -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

### ②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사례

- 수도권 공장 기업 규제 완화 사례
  - 산집법, 수정법 등 법으로 수도권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주한미국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의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고 있음

<수도권 공장 기업 규제 완화 사례>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완화내용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건설	- 고덕산업단지에 15조 6000억원 투자 · 1단계 투자에 15조6000억원 집행 · 고덕산업단지 투자를 통해 7만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김포	거물대리 공장 난개발	- 김포시는 1996년 공장등록이 급격히 증가, 2000년부터는 매년 약300여개의 공장 등록 -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의 증가는 산집법에 의한 공장 신·증설 원인 ·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이 200→500㎡로 규제 완화	산집법 수정법	- 공장입지기준고시 (산자부 고시2004-98) 제 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삭제(2008) - 김포시에 입지해 있는 전체 공장의 63.5%가 관리지역에 입지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공장 및 창고건설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 있음

### 3. 영향관계 분석

#### 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금지된 재정지원 허용

##### ◦ 정성적 영향분석

- 수도권 중심 기업 집적 및 지역 기업유치 난항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입지비용 지원 비율 축소로 지방투자와 지방 신규고용이 대폭 감소
-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유턴 심화 → 수도권 기업, 인구, 투자 집중
- 비수도권 지역내 신규 국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내 기업유치 어려움

##### ◦ 정량적 영향분석

-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하여 금지되던 재정지원이 허용됨으로써 비수도권에 투자하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투자를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감소액을 산정

<경상북도 연평균 지방투자금액과 감소 금액>

(단위 : 억 원)

	100% 감소	80% 감소	60% 감소
의한 투자액	1,022	817	613
입지시설보조금에 의한 투자액	13,219	10,575	7,931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발생하는 경상북도 피해>

(단위 : 억 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지방투자촉진금	100% 감소	1,925	411	383
	80% 감소	1,539	328	306
	60% 감소	1,155	246	229
지방투자촉진금 + 입지시설보조금	100% 감소	26,823	5,725	5,331
	80%감소	21,457	4,580	4,624
	60%감소	16,093	3,435	3,198

## ②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 ◦ 정성적 영향분석

- 수도권 인천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유치에 가능해지고, 지역 대기업 투자 감소 및 기업 유치에도 큰 타격
- 현재의 산집법상 인천에 허용된 공장 신·증축 면적도 100만㎡에 불과,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 입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수도권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2012~2014)>

(단위 : 개, 천㎡)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536	36	1,000	4,500
산단외의 공업지역	2,124	24	750	1,350
개별입지	3,412	12	250	3,150

：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

('09 ~ '11)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자료: 강원도,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계획, 2014.

- 그러나 법 개정 시,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입주 및 신규 투자가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LG,삼성등 대기업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비수도권에 대한 신규 투자 철회 및 이에 따른 관련 기업 수도권 유출이 예상됨

### ◦ 정량적 영향분석

- 수도권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공업지역, 준공업지원 등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 공장단위 면적을 적용하여 비수도권 피해 규모를 산정
- ex)경상북도 : 공장단위 면적은 연면적 500㎡를 기준으로 함.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이론상으로 입지할 수 있는 공장 수를 산출하여 영향력을 추정. 이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를 비수도권 기업투자유치 실적을 기반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각 지역별 피해규모를 산정



## 4. 정책적 대응방안

### ① 입지·산업 및 환경 분야

#### ▣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 국가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기업유치를 장려하는 것은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의 각종 금지조항을 ‘산집법 시행령’에 명시화함
- 중장기적으로 광역상수원 관리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역행하는 본 규제개선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고시철회 촉구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특별분과 신설을 요구
- 일률적인 보조금 적용이 아닌 산업단지별 특화업종에 따른 차등보조금 지급규정 신설을 요구

#### ▣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의 개정안 고시 이전의 허가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건의
  - 201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었던 특별배출허용 기준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2014년 1월 17일에 들어서야 고시됨에 따라, 2013년에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집단)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
-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따른 상수원의 영향 검토
  - 201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었던 특별배출허용 기준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2014년 1월 17일에 들어서야 고시됨에 따라, 2013년에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집단)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

## ② 산업단지 분야

### ▣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총량제 도입 검토를 건의
- 산업법 제7조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있어, 수도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건의
- 수도권·비수도권 간 도시첨단산업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차등 적용을 건의
-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 상충됨을 어필

### ▣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수도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최소화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 (수도권 0~1개, 비수도권 8~9개) 혹은 현행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총량제 규정의 강화 적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제한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

### ▣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지원

- ‘맞춤형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 미개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 지방자치단체 별 장기계획에 따라 지정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검증기관인 “신규산업단지 타당성조사위원회 신설”을 건의
- 수요검증 시 비수도권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건의
- 산업단지 수급관리에 대한 계량적 지표마련을 건의

## ② 대학 부문

### 1. 규제 실태 분석

####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 수도권정비 시책 중 대학규제
  - 수도권 내 대학신설 및 이전(입지규제) 등 대학규제와 관련
  - 수도권 내 대학의 입학정원 관련 규제(총량규제)의 내용
-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배치되는 규제완화 시책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대학 육성’을 공약하였고,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2013.7.3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②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학캠퍼스 확장·이전 현황

-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
  - 2010~2015년 3월 현재까지 대학캠퍼스 확장·이전 현황으로,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
-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 송도지구 등 도시개발지역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이 뚜렷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정부·지자체의 수도권 난개발 정책과 이를 ‘규모 확장’ 및 ‘in 서울 대학 입성’의 기회로 삼으려는 대학의 이해관계 일치
  -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

### ③ 주요 문제점

#### ▣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심화 및 인구 유입 요인 차단

- 지방대학이 외부로 이전해 간다는 것은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요인의 감소

- 대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대학이 부재할 경우 그러한 요인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
- 대학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교수와 이들을 지원하는 교직원들 역시 소비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하지만, 이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소멸됨
- 결론적으로, 지역경제에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등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부(-)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됨

####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및 균형발전 저해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그 대학 졸업생들이 지방에 취업하고 남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일자리창출 및 인력수급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게 되면, 수도권에 양질의 고등교육기관 집중이 심화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수도권 대학의 투자는 점증하겠으나, 지방대학의 경우는 투자요인 감소 예상
  - 고등교육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 2.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학 이전 사례

### ◦ 비수도권 대학(4개소) 이전

- 정부의 규제완화 실태 및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으로 이전이 확정된 대학은 청운대학교, 중부대학교, 경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의 총 4곳임

<비수도권의 대학 이전 사례>

지역	이전 대학	현황
충청남도 홍성군	청운대학교 이전	-10 학과, 교직원 및 학생포함 2000여명
충청남도 금산군	중부대학교 이전	-24개 학과, 3460명 학생 -제2캠퍼스 경기도 고양시 412.184 조성
강원도 고성군	경동대학교 이전	-17개 학과 중 5개 학과 300여명 이전
전라북도 임실군	예원예술대학교 이전	-4개 학과, 400여명 이전

- 지방대학 중 수도권 이전 진입 1순위인 청운대학교가 인천캠퍼스로 10개 학과를 이전하자, 홍성군 주민들이 충청남도청 앞에서 이전반대집회를 갖고 “수도권 캠퍼스 이전은 지역상권 말살행위이자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그 결과 2014년 홍성군에 위치한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홍성캠퍼스가 모여 있는 일명 ‘홍성 대학로’ 주변의 상권이 침체되고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 중부대학교 이전 사례

- 충청남도에 위치한 중부대학교는 2017년까지 공과대학과 예술대학 등 2개 열 24개 학과의 총 3,46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제2캠퍼스를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고 부분 이전할 계획임
- 충청남도에 위치한 중부대학교는 2017년까지 공과대학과 예술대학 등 2개 열 24개 학과의 총 3,46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제2캠퍼스를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고 부분 이전할 계획임

- 지역 인구와 중부대학교의 학생 규모를 감안했을 때, 추부면 지역에서 중부대의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부대학교가 소재한 추부면의 ‘부동산 및 임대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산업활동을 보면, 이들 업종의 사업체들이 금산읍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중부대학교의 이전은 현 소재지인 추부면 마전리의 영세 사업장 및 관련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강원 영북지역의 유일한 사립 4년제 대학인 경동대와 전라북도 임실에 본교를 둔 예원예술대 또한 비슷한 수준(300~400명)의 이전을 계획 중이므로, 두 대학 주변 지역의 피해 상황이 청운대 내지 중부대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 3. 영향관계 분석

#### ① 정성적 영향 분석

##### ▣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캠퍼스 주변 원룸가 경기 침체 우려 현실화

- 지방대학의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해당 대학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가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중부대가 고양캠퍼스로 이전한 뒤 월세·원룸 학생 감소(4,000→2,000명)하며, 세명대가 이전하면 공실률이 90%까지 치솟을 것이라 우려(「한국대학신문」, 2015.4.12.)

##### ▣ 대학문화의 지역사회 가치 창출 효과 감소

- 대학문화가 시민들에게 전파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송광호 의원(제천시)은 “광역시에서 대학 하나 빠지는 것 큰 문제 아니지만 중소도시에서 대학 하나 빠진다면 경제적 타격이 크고 큰 일이 난다.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아시아뉴스통신」, 2014.10.21.)

▣ 대학이 떠나는 지역과 대학을 유치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둘러싸고 잃는 지역과 얻는 지역 간에 호불호가 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론 분열이 나타나고 있음
- 충북제천 시민측은 “지방대 수도권 이전을 법적으로 막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범시민 입법건의와 청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한국대학신문」, 2014.11.3.)

## ② 정량적 영향 분석

▣ 대학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이전에 따른 영향 분석

- 황규선 외(2007) 한림대학교 사례 제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총 소득 창출액은 연간 총 1,504~1,693억 원, 지역에 창출되는 영구적인 소득흐름의 현재가치 최대 3조2,362억 원 추산

<한림대학교의 총 소득 창출>

(단위 : 만 원)

		연간 소득창출액
직접 소득창출액	고용소득	2,942,964
	외지진학비용 감소	1,925,521~3,126,006
	소 계	4,868,485~6,068,970
간접 소득창출액	대학지출	2,078,267
	비거주 교직원 지출	133,069
	학생지출	2,500,004
		4,711,340
유도 소득창출액	소계	5,460,500~6,144,777
총 계		15,040,325~16,925,087

자료 : 황규선 외(2007),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원

- 강승구 외(2004) 울산대학교 사례 제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총 소득 창출액은 2001년 기준으로 약 1,193억 원 추계, 이를 영구적 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2조 3,860억 원

<울산대학교의 총 소득창출 효과>

(단위 : 만 원, %)

		연간 소득효과	구성비
직접소득	고용소득	3,788,123	31.7
	외지진학감소소득	2,920,367	24.5
	소 계	6,708,490	56.2
간접소득	학교당국지출소득	766,571	6.4
	학생지출소득	1,763,934	14.8
	소 계	2,530,505	21.2
유도소득	투자승수가능부문소득	2,327,239	19.5
	투자승수불가능부문소득	362,960	3
	소 계	2,690,200	22.5
총 계		11,929,195	100

자료 : 강승구 외(2004),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효과"」 경제연구 22(3)

## 4. 정책적 대응방안

### ① 법·제도적 근거의 확보

#### ▣ 헌법 개정을 통한 관련 법률의 후속적인 제·개정 시도

-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 법률적 근거 마련
- 헌법 개정을 위한 제2의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필요
- (가칭) '분권형 개헌을 위한 연구회'와 같은 연대 조직 결성
- 지방분권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구체화한 개헌 촉구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 현재 수도권의 권역 구분 및 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권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원입법에 의해 개정 추진
- 권역 조정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 기준 강화 필요



<수도권의 권역 조정 관련 조항의 개정(안)>

전	개정 후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b>대통령령</b> 으로 정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b>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수정법 시행령에 근거해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대학의 신설 및 이전 가능
- 4년제 대학과 동일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대학의 신설·이전 저지

<수도권의 산업대학 신설 및 이전 관련 조항의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 학교의 경우 가. 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_____,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b>산업대학과</b>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b>산업대학(삭제)</b> ,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b>산업대학과(삭제)</b>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

-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체의 공조 필요
- 개정안의 법 개정 심사 중단 및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수도권 지자체 및 관련 단체들의 저지 움직임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정부를 상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정책 수립 강력히 요구

- 교육부가 대학 이전을 승인함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과밀화를 유도하는 미군공여구역법의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또한 폐지

-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국·사립 비중 조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학정원 조정안 마련,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함

####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원책 마련

- 지자체는 지역 내 고교졸업생이 지역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마련 조례 제정

### ②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정석, 2015)

#### ▣ 해당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

- 지역인구의 급감이 지방대학의 수도권행을 부추기고 있으므로(「캠퍼스 라이프」, 2015.4.13.), 학생 미충원의 악순환 구조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
- 금산군, 중부대, 중부대이전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상생 협약 체결 (2015.6.18.) → 중부대학교 금산캠퍼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역발전 방향 논의 → 갈등 해결의 실마리

#### ▣ 다양한 주체의 참여, 연합에 의한 수평적·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상생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역량 결집
- 세력 다툼 등이 조직적 연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상호 주의와 배려 필요
-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화로 시·도 간 불협화음 최소화 및 한 목소리 내기
- 비수도권 민·관·정의 협력을 통한 전국 차원의 공동 대응기구 설치

### ③ 비수도권 지역 연대를 통한 통일된 대응전략 수립(이정석, 2015)

#### ▣ 기존 대응방식의 과감한 탈피 및 긴급한 수정

-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일부 지자체, 주민단체/주민대책위원회 등만 대응의 목소리를 높이는 소극적 대응은 지양

- 비수도권 지역 연대를 통한 통일된 대응 필요
- 초광역권 도시 간, 구 광역경제권 단위 시·도 간, 행복생활권 단위 시·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자생적 발전역량 육성 방안 수립

#### ▣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논리 개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와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의 일원화
- 실효성 있는 지방활성화 대책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대정부 요구

#### ▣ 시·도별 (가칭)'수도권 이전 대학 대응 포럼'의 상설 운영 추진

- 비수도권 시·도별로 포럼을 상설 운영하되, 순차적으로 생겨나는 타 시·도의 포럼과 상호 연대하면서 공통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③ 관광시설·투자 부문

#### 1. 규제 실태 분석

#####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관광시설·투자와 관련된 법에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음
- 관광진흥법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규제

##### ②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진행 현황

- 정부차원에서는 1~7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복합리조트 산업 추가선정,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이 진행 중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관광시설·투자 진행현황>

	사업	내용	시기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 서울 3개의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 '15년 하반기부터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관광객 추가 유치 기대	2015년 하반기
투자수요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복합리조트 산업 추가선정	- '15년 복합리조트 사업자 2개 내외 추가 선정 -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 기대(1개소당 1조원)	2015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 산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프로그램 확대로 국내 관광객 유치 확대 기대	2015년 1/4분기

자료 : 제6차, 7차 투자활성화대책 보도자료

- 민간차원에서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경기 고양시의 한류월드, 경기 과천·안성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진행현황>

	사업	내용	시기
서울 노량진	해양수산 테마 복합리조트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부지(4만8천233㎡) - 총 투자금액 1~2조원 예정	추진예정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일대 동쪽 부지(420만㎡) - 총 투자금액 5조원 예정	추진예정
인천 서구	아시안게임 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	-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일대 부지(627,000㎡)	추진예정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구 복합리조트	- 1단계 16억 달러를 시작으로 총 1~2조원 예정	추진예정
	리포&시저스(LOCZ) 복합리조트	-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규모 42,455.8㎡ - 총투자금액 7,437억원	2018년 개장예정
	파라다이스 시티	- 인천국제공항 IBC-I(330,000㎡) - 총 사업비 9,857억원, 자본금 2,429억원	2017년 개장예정
	드림아일랜드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3,160,000㎡) - 총 사업비 2조 400억원(부지조성:3700억원, 상부시설:1조6700억원)	2020년 개장예정
경기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원(185,000㎡) - 1조 6천억원 투입(경기도·과천시 51%, 롯데 49% 지분 투자)	2021 준공예정
경기 고양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조성사업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1523번지 일원(994,756㎡) - 200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5년 4월 승인 고시, 2013년 1단계 사업준공, 현재 복합시설용지 분양중)	2015.12 준공예정
	K-컬처벨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 내(약 33㎡) - 콘텐츠 파크, 상설공연장(1500석), 글로벌 한류문화 체험공간 - 씨제이 등 민간 컨소시엄 1조원 투자	2017년 말 완공예정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 진흥계획	-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과 킨텍스 주변 5.7km²를 '한류( 流)'와 마이스(MICE)산업을 주제로 한 관광특구 지정 추진	2015년 4월 신청
경기 안성	안성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일원(146만8천㎡) - 총투자금액 7천여억원(\$3억은 만순달그룹 투자예정)	2015년 하반기 착공예정

### ③ 주요 문제점

#### ▣ 관광시설·투자 규제완화 수도권 혜택 집중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감소 추세

#### ▣ 관광호텔 규제 완화

- 관광호텔 객실수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40,262개로 39,131개인 비수도권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률 역시 70.6%대 50.9%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음

#### ▣ 인천 영종도에 대한 과도한 관광시설·투자 규제 완화

- 인천 영종도에 3개의 복합리조트 건립 허가와 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관광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경기 고양시의 한류월드와 정부의 K-컬처벨리 중복투자

-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 안에 정부의 K-컬처벨리를 추가로 투자함에 따라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있음

#### ▣ 수도권 지역의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집중

- 카지노 종사원수 1곳당 수도권은 평균 739명, 비수도권 평균 217명 고용
-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계속적으로 추진·건립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타격 예상

#### ▣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해제 논란

- 경제 단체는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 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
- 특별법이 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도 함께 해제될 우려가 있음

## 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 ① 비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피해사례

- 부산 기장군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광주·전남·전북·경북 지역의 시내면세점 운영 또는 신규 개장에 대한 규제들로 피해를 보고 있음

<비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피해 사례>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내용
부산 기장 군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장군 대변리와 시랑리 일대 368만㎡, 총 4조 원 -영상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 -3번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패	관광진흥법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의 하나로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에서 단독 또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허용 등 시설규제 완화 필요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시내면세점 운영 또는 신규 개장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없음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 외국인 방문자 수 30만 명 이상 증가

자료 : 비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피해사례 언론보도 정리

국민일보(2015.06.08.), "무역협회, 시내면세점 부재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 건의"

### ②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사례

- 경기 용인의 삼성에버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서울 종로의 대한항공 관광호텔 건립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이 피해를 보고 있음

<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규제 완화 사례>

지역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위반내용
경기 용인	삼성에버 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석리 일대 646만1410㎡ -콘도 골프장, 호텔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체류형 종합리조트 -'09년 12월 수도권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646만1410㎡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함	수도권 정비계 획법 자연보 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에 6만㎡ 이상의 관광단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서울 종로	대한항공 관광호텔 건립계획	-'12년 10월 문체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14년 8월 교육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시행	관광진 흥법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규제

자료 :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위반사례 언론보도 정리

### 3. 영향관계 분석

#### ① 영향관계 분석 방법론

#####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방법

-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한국은행) 병행 측정 필요
- 수도권 지역에 투자된 관광 산업의 경제효과 측정,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 정도를 확인 가능

##### ▣ 관광산업의 승수 효과

- 관광산업으로 분류된 10개 산업을 1개의 단일산업으로 통합하여 분류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승수 1.7052, 소득유발승수 0.3001
- 취업유발승수는 관광산업에서 0.0229, 고용유발승수는 0.0121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타 산업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함
- 부가가치유발승수는 관광산업이 0.7141, 수입유발승수는 0.2859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이 수입의존도가 낮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세수유발승수는 관광산업이 0.0968, 관광산업 평균이 0.1063로 모두 전산업 평균(0.0717)보다 높게 분석됨

<표VI-1> 관광단일산업, 관광산업 평균, 전산업 평균의 각종 유발승수표

	관광단일산업*	관광산업 평균 (10개, 28~37부문)	전산업 평균 (1~27부문)
생산유발승수	1.7052	1.6339	1.9542
소득유발승수	0.3001	0.3368	0.2980
취업유발승수	0.0229	0.0181	0.0134
고용유발승수	0.0121	0.0107	0.0088
부가가치유발승수	0.7141	0.8229	0.6739
세수유발승수	0.0968	0.1063	0.0717
수입유발승수	0.2859	0.1771	0.3261

주 1) \* 관광산업으로 분류된 10개 산업을 1개의 단일산업으로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2) 전산업은 관광산업(28~37부문)을 제외한 1~27부문임

자료 : 이강욱(2010),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② 수도권 관광단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

### ◦ 정성적 영향분석

- 경기도 고양시·과천·안성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으로 관광단지의 투자 집중이 예상되나 비수도권의 관광단지 투자 감소 예상

### ◦ 정량적 영향분석

- 경기 지역 관광단지 민간 투자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액은 생산유발효과 최대 158,58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최대 66,411억, 취업유발효과 최대 212,97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경기지역 관광단지의 민간투자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영향력(피해액)>

(단위 : 억 원, 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투자규모 감소	100%	158,583.6	66,411.3	212,970
	80%	126,866.9	53,129	170,376
	60%	95,150.2	39,846.8	127,782

## ③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정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

### ◦ 정성적 영향분석

-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설립요건 규제완화로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추가 증설 예상
- 또한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정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방문객과 수익 측면에서 손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 ◦ 정량적 영향분석

- 영종도 복합리조트 민간 투자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액은 생산유발효과 최대 64,275억, 부가가치유발효과 최대 26,917억, 취업유발효과 최대 86,319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경기지역 관광단지 민간투자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영향력(피해액)>

(단위 : 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투자규모 감소	100%	64,275.8	26,917.3	86,319
	80%	51,420.3	21,533.7	69,055
	60%	38,564.8	16,150.1	51,791

## 4. 정책적 대응방안

### ① 제도를 통한 수도권 규제 강화

- 산지관광특구 제도 시행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속한 수도권 지역은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산지관광특구 관련 특별법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지역은 예외조항을 통해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의 방안 필요
- 관광호텔 규제 완화시 수도권지역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현행 관광진흥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규제를 50m이상,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 객실 100실 이상인 관광호텔을 별도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추진 중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가요건 완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카지노 설치요건 완화로 수도권 내 카지노 난립 예상, 제주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피해 예상
  -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강화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

### ② 수도권 관광 규제 완화시 비수도권에 인센티브 제공

- 영종도 지역 수익금의 일부를 비수도권 관광발전기금으로 활용
  - 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 허가로 약 29조 생산유발효과 예상
  - 수익금의 일부분을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발전기금(안)으로 조성
- 수도권 지역 관광 개발 및 규제 완화시 비수도권 관광발전기금 부담금 편성 의무화
  - 비수도권 관광발전기금 운용 통해 비수도권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활용
- 관광 지역 등급화를 통해 비수도권 정부 지원
  - 지역간 관광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급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등급화 시행

## ④ 지역개발 부문

### 1. 규제 및 법률 현황

####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촉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임

#### ②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과 쟁점사항

- (2014. 7) 전경련·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건의
  - 전경련 핵심쟁점 규제완화 사항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 경기도/인천 건의 핵심쟁점 규제완화 사항 :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조성,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수도권에서 제외
- (2014. 5~2015. 2) 1~7차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완화 연관
- (2014.12.28.) 민관합동회의, 규제 기요틴과제 153건 검토
  - 수도권 규제관련 과제는 23건에 포함, 추가 논의 필요항목으로 분류
- (2015.1.19.) 정부, 수도권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마련
  - 총 투자금액 21.9조원 중 15.4조원(70.3%)이 수도권 투자 집중, 비수도권 지역에는 6.5조원(29.7%) 투자

#### ③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규제 관련 현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GB지정 후 유지에만 집중, DJ정부에 들어서면서 중소도시권 해제 등 총 781km<sup>2</sup>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집단취락 등 총654km<sup>2</sup>해제, 이명박정부 보금자리주택 등 해제 총 88km<sup>2</sup>

- 2010년 이후 연도별 택지개발현황
  - 진행 중인 곳은 12개 사업지구(개) 10,388천(㎡), 이중 수도권지역은 3곳으로 전체 진행 사업중 25%의 비율을 보임
  - 준공이 완료 된 곳은 38개 사업지구(개) 48166천(㎡), 이중 수도권 지역은 14곳으로 전체 준공지역의 50%의 비율을 보임
- 전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대상지역
  - 경기도에 전체 공여면적의 87%인 210.81km<sup>2</sup>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170.98km<sup>2</sup>(전국 반환면적의 96%))가 반환될 예정이고 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5,028.03km<sup>2</sup>임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단위 : km<sup>2</sup>)

	총계(사업대상)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경기도	35	5,199.01	35	170.98	2028.03
북부	29	3,390.38	29	143.11	3,247.27
남부	6	1,808.63	6	27.86	1,780.76

### ③ 주요 문제점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지방경제 공동화”와 같음
-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위주 정책
- 지역특화전략보다는 지역별 할당식 균형발전의 폐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의 혼란과 실효성 부족
- 새로운 지역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응력 부족
- 과밀화된 수도권에 국가역량이 집중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지역불균형 심화
- 지방경제 쇠퇴화 가속
- 비수도권의 자립적 정주기반 상실

## 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 ■ 비수도권의 지역발전 피해사례

<비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피해 사례>

지역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내용
충남 천안 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천안·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 급감</li> <li>· 천안시 경우 2009년(57개)→2013년(1개)로 나타남</li> <li>· 아산시의 경우 2011년(10개)→2014년(1개)로 나타남</li> </ul>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활성화</li> <li>-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위면적 제한기준 완화</li> <li>-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기준 조정</li> <li>-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합리화</li> <li>-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조기개발</li> <li>-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li> <li>-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li> <li>- 판교창조경제 벨리 조성</li> </ul>
충청	수도권 기업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부터 45만 7634㎡에 국비와 민자 등 677억 1900만원을 들어 산업단지 조성</li> <li>- 산업단지에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수요에 맞춰 업종을 다양화시켜 약20~30개 업체를 입주시킬 방침</li> </ul>		

자료 : 비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피해사례 언론보도 정리

### ■ 비수도권의 지역발전 규제 완화 사례

<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규제완화 사례>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위반내용
구리	구리 월드디 자인센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말부터 토평동 일대에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구상, GB 해제물량 확보(1.690km<sup>2</sup>, 50만평)</li> <li>- '구리시의회 상정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DA) 체결 동의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 시의원의 반대 속에 날치기 통과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와 구리시는 관리가 어렵고 난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수질과 수변경관 훼손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친수구역 사업을 합리화</li> <li>- 국고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구리시의 사업은 이 기금이 지원되는 운영 목적에 맞지 않음</li> </ul>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 아울렛 건설(신세계체스)을 위한 부지26만5천500㎡를 경기 여주 군으로부터 약 52억3천만 원가량에 사들이 공사 시작</li> <li>-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2관은 지난 2013.10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8월 건교부는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사업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판매 시설 건축의 경우 1만5천㎡를 넘지 못하도록 수정법을 위반한다고 여주군에 통보</li> <li>- 수정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체스는 '건축주 명의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사업을 강행</li> </ul>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165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15만6481㎡ 규모로 건설</li> <li>- 골프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고 호소, 애머슨퍼시픽은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평군은복지구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지역발전과 경제파급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시행자인 애머슨퍼시픽의 기업의 이익을 위한 특혜 개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사업에 대해 여전히 반대</li> </ul>

: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위반사례 언론보도 정리

### 3. 영향관계 분석

#### ■ 수도권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지정 확대

##### ◦ 정성적 영향분석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수도권 기업입지공간 확대로 주력산업 투자 감소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연
-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집중 현상 심화
- 2003년부터 수도권 대기업 유치에 따른 삼성, LG가 입주한 구미시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사항
- 지역 대기업 투자 위축, 관련기업 이전 본격화될 우려
- 비수도권 국가산업단지내 기업유치 어려움→일자리 부족→청년층 인재 유출→지역경제 공동화 심화

##### ◦ 정량적 영향분석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수도권 기업인지 면적확대로 인해 경상북도와 MRO를 통해 지역에 투자하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투자를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감소액을 산정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MOU를 통해 경상북도에 투자하던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액은 대기업 2조 4,052억원, 중소기업 1조 5,419억원으로 산정

<인천 항만·공항 배후지역 공장허용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피해액)>

(단위 : 억 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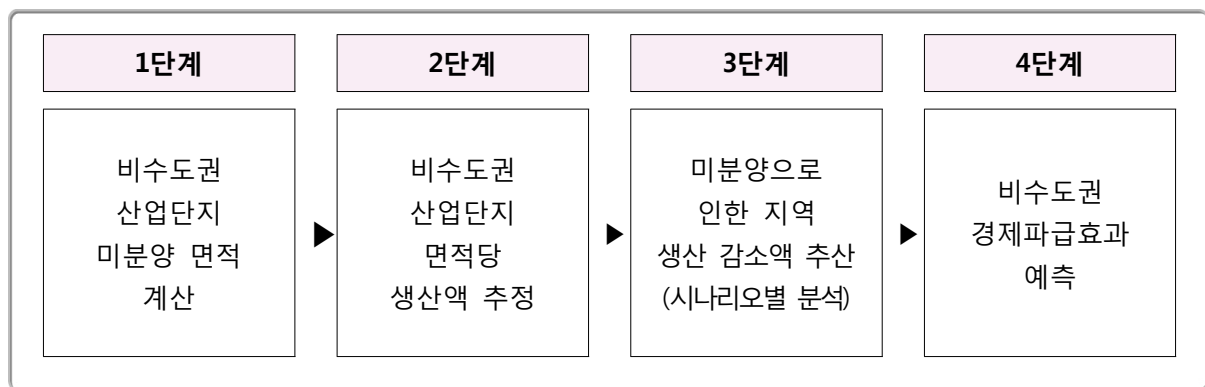
분	100%감소	80%감소	60%감소
대기업	24052	19241	14431
중소기업	15419	12335	9251

####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 ◦ 정성적 영향분석

-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 폐지와 관광시설 전면 허용은 수도권으로의 기업체 및 관광시설의 편중화 초래
-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첨단시설 공장의 신·증설 증가 및 관광시설의 수도권 집중 →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불균형 심화

- 수도권 내 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전남지역 내 기 조성되었거나 조정 중인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증가로 기업수요 위축 → 미분양 지역 내 기업 미 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효과 감소
  - 수도권의 비효율적인 난개발 초래 →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 및 전국 지역간 산업구조 편중현상 심화
- 정량적 영향분석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나리오별 가정을 통해 추정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제 철폐에 따라 기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 발생 및 자연환경 오염은 더욱 심화가 예상됨
  -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제한으로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 되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의 이전기업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분양 면적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추정하고 비수도권의 영향력을 분석



<그림Ⅶ-1> 비수도권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정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 주한미군 이전지 및 공여구역주변지역 규제완화 특례조치
- 수도권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추진
- 개발제한구역 해제확대 및 보전부담금 경감
- 산·농지 및 수자원 관련 규제완화 특례조치

## 4. 정책적 대응방안

### 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 ▣ 산단개발 사업 시행자 요건 추가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 ▣ 지자체 허가전담부서 설치 확대

### ②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TF팀구성

#### ▣ 모니터링

- 정부에서 발표되는 주요 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차원에서 모니터링 필요

#### ▣ 대응 TF팀구성

- 수용 가능정책과 수용불가 정책을 구분하여 수용가능 정책의 경우, TF팀(관련과, 연구원, 관계기관)을 구성하여 대응 방안 및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모색

### ③ 지역등급제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 결정의 근거로 활용

#### ▣ 지역별로 발전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하여 차등화된 지원정책 추진 필요

- EU와 영국에서도 지역등급제를 시행하여 지원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 지역별 등급자료를 구축하여 지원근거로 활용

- 낙후지역 우선의 재원배분에 활용
- National Minimum정책을 시행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지역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



#### ④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및 대규모 투자금액 완화

- 보조금 지원은 최고 60억 원 초과할 수 없고, 대규모 투자.이전 시 7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지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최대 10% 이내로 상향 조정
- 지원우대지역, 낙후지역의 경우에 투자금액을 800억 원에서 지역개발지원법상 투자선도지구 지정금액인 500억 원으로 축소 검토
-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역행하는 본 규제개선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고시철회 촉구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특별분과 신설을 요구
-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 이외에 물류비 보조 등 추가 보조사항을 신설을 요구
- 일률적인 보조금 적용이 아닌 산업단지별 특화업종에 따른 차등보조금 지급규정 신설을 요구
- 지역차원에서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 ⑤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되면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개발총량의 42%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장의 인기 영합적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국토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재량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해제

## ⑥ 지역차등계수를 적용한 예비타당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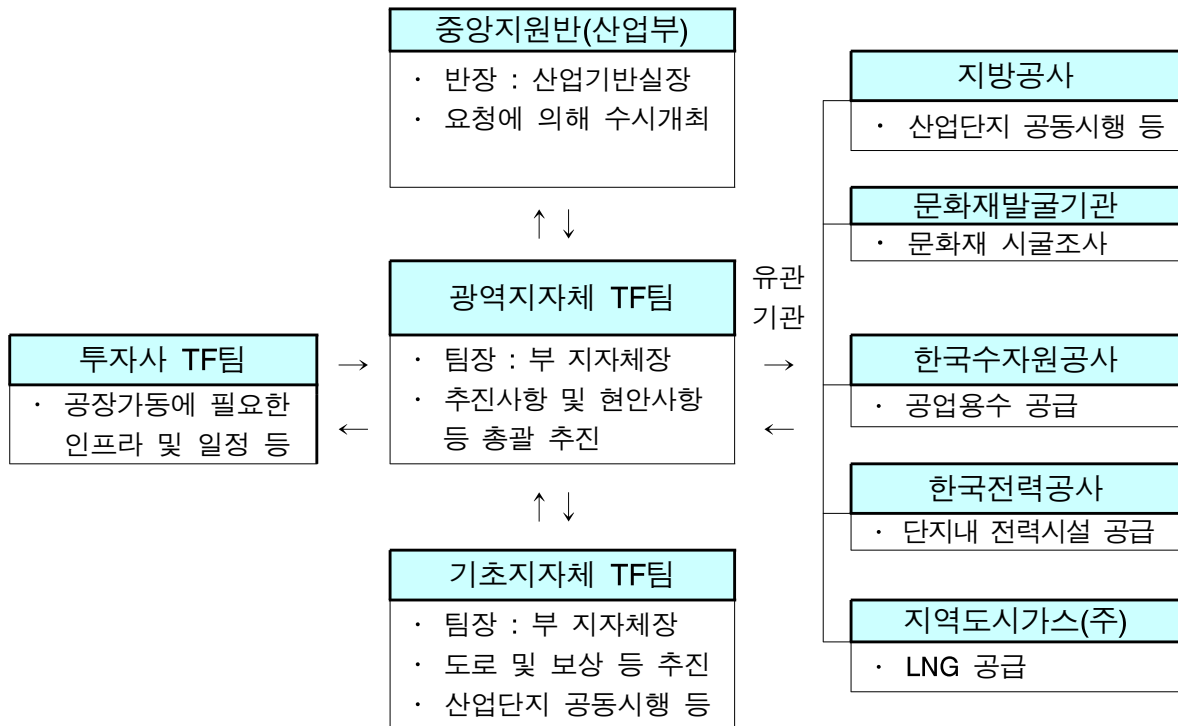
- 지역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고 주민 생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통 인프라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 예비타당성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과 지역개발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업편익(수요) 창출이 어려운 비수도권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총 사업비 규모와 조사방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방안을 적용함과 동시에 경제성평가에 지역차등계수(RFC: Regional Differentiation Factor)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시설투자 사업타당성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⑦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방안

- 현행 기업이전 투자 보전 지원제도
  - 세제·금융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2004년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을, 2008년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설하였고, 이것이 2011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생산기능의 이전이 아닌 기획 및 R&D 등과 같은 기업활동의 핵심기능을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대기업을 본사 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역간의 상대적 입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열악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1절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 ■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lt;표VIII-1&gt;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정책과제	주요내용
지역균형정 책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확대 -수도권 개발이익환수금, 과밀부담금 등을 확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
	지역발전등급제	-등급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수도권 민간투자 중심, 비수도권 정부 재정사업 중심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강화 -비수도권 지역 우선 도시재생사업 추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통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컨트럴 타워' 기능 강화 확대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마련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의무적 행위 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지역균형발전' 개념 정리, 균형발전 계획 수립 내용 추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주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 -생활 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협력 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회 기능강화 -상생협력 부담금과 조세에 대한 재평가 -수도권의 정책방향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지방본사 유치(내생적 발전, 선순환경제 구조 구축) -지역별 속력기술진흥센터 설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컨트럴 타워' 기능 강화·확대
법·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 시도 저지	-정부·수도권 의원 중심,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시도 반대입장 표명(공동성명서 발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수준의 법률로 제정 -균형발전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의무적 행위 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면 개정	-지역위 광역경제권간의 의견조정 또는 계획을 협의·조정 역할담당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권한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발전위원회 확대·개편	-'지역발전위원회'→'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 -행정기관적 성격 부여로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및 집행권 행사
	지역개발 지원제도 개편	-대규모 개발위주 균형정책의 대안마련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및 사회적 활인을 차등 적용
재정	비수도권 분권제도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의 「지방 소비세」 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세 지방세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재편 -자립적 지방화가 가능한 규모로 행정구역 통합 조정 -지방 4단체의 법적 위상 제고
	교부단체 '지방소비세' 확대	-지역별 가중치 확대 : 수도권(동일 100%), 비수도권 광역시(200%→300%), 비수도권 도(300%→500%)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22% 확대 -교부세 재편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균형발전교부세(신설),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 추가확충 방안	-지방교부세에 대한 법정률 인상요구
	지방재정 확충 위한 신 세원 발굴	-지방 환경세, 신재생 에너지세, 해양심층수, 낙시행위 등 신세원 발굴

(표 계속)

	정책과제	주요내용
산업	위한 인센티브 강화	-비수도권 이전 기업 대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 지급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 대폭 상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조정(수도권 이전기업 대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증가 : 현행22%→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완화(기업내 부서 인력 80% 이전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총 투자금액의 최대 10% 이내로 상향 조정)
	비수도권 이전기업 종사자 주거여건 개선 지원	-사원주택 및 기숙사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보조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 -이전기업이 종사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일부 세제 및 부대비용(취.등록세, 재산세, 부동산 수수료 등)지원
	비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회귀시 규제제도 마련	-기업 자본금 대비 지원받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 -타 지역으로 이전시, 지원받은 보조금 이상을 부과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재량권 도입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낙후도 등을 적용하여 기업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역 고용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지원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지역별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집적화 및 네트워킹 강화 -지역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수도권 개발행위에 대한 요건강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 비수도권 출신 위원 배정 -공장 신·증설 자금 대출을 비수도권지역에 우선 배분
	수도권의 본사기능 지방이전 촉진 지원	-선도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세제 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지원 등)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지방의 입지여건 개선 지원)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획기적 지원, 종합지원체계)
	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개발의 균형분산 정책 시행 -중앙정부 지원하는 연구 거버넌스 체계 마련 -지역 R&D,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견고화
	핵심 지역인재 확보 위한 지원 강화	-비수도권에 지역인재 확보 위한 적극적 우대 마련 -비수도권에 지역고용 촉진 정책과 연계한 R&D 인력 확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지역별 숙련기술진흥센터 건립·운영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수도권 개발행위에 대한 요건강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 비수도권 출신 위원 배정 -공장 신·증설 자금 대출을 비수도권지역에 우선 배분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비수도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비수도권 유턴기업 종합지원책(입지시 보조금·조세감면) 마련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제공 · (비수도권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7년→10년), 부지 국비지원율(75%→ 90%))

(표 계속)

	정책과제	주요내용
산업	유탄기업 재정 지원	-비수도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비수도권 유탄기업 종합지원책(입지시 보조금·조세감면) 마련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제공 · (비수도권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7년→10년), 부지 국비지원율(75%→ 90%))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대상 면적 및 적용대상 범위 강화 · 대상 면적 기존 환원 : 500㎡ → 200㎡ 재조정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보전을 위한 중복규제 강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지역 지정요건 강화 및 공장총량제 강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관련 정부차원의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필요
	수도권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지정 확대	-무분별한 산업단지 확대 반대 → 기존 산업단지부터 체계적 관리 -제조업 기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창조산업 육성
	대기업 첨단업종 입주허용 범위 확대 조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첨단업종 선정, 차별화된 전략 마련
	지역사업육성 및 인재양성 중점 추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산업진흥원 등 기관 통폐합 운영 -지원서비스의 일원화 및 지역 전략산업 선도산업 육성 위한 One-Stop 지원 기능 강화
	지방 산업인력 및 연구인력 양성·수급 기관 지방 이양	-지역특성화대학 육성 위한 폴리텍대학 운영권 광역자치단체 이관 -지방대학의 R&D, 산업인력양성 기획·지원 -마이스터고 기능 및 예산 구축
	지방과학기술발전 위한 R&D 기획·평가 기능 지방 이양	-지방대학 교육지원 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광역 지방대학발전위원회’ 설치 -지역 R&D 거버넌스체계 일원화 위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상생형 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상생형 산업단지 조성방식 채택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중장기적으로 광역상수원 관리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요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특별분과 신설 요구 -산업단지별 특화업종에 따른 차등보조금 지급규정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이전 입주공장 규제수단 마련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따른 상수원 영향 검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총량제 도입 검토 건의 -수도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개정안 건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지원	-‘맞춤형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중앙정부 지원 촉구) -‘신규산업단지 타당성조사위원회 신설’ 건의
	지역 산학협력사업 재편	-산학연관 협력의 기본 틀 구축(목표설정, 저책 매트릭스 설계) -창업·신성장 창출에 특화된 전주기적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성
	핵심 지역인재 확보	-지역대학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지역 R&D 인력 공급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대와 지방소재 가점 프로그램 도입
	지역특화산업 육성 위한 기구설립	-(가칭) 지역별 숙련기술진흥센터 설립 -고용친화적, 숙련 이동성 강조하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광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고용과 R&D 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산업정책 구축
	제조업 기능의 지방이전 촉진	-수도권 혼잡세의 강화와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선도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지방에서의 선도적 혁신주체 역할 강화) -지역전략산업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지방기업의 수축기업화 지원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위임, 이양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권한의 수권 능력 배양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법제화

(표 계속)

	정책과제	주요내용
교육	육성 지원	-지역출신 의무고용제 확대 -수도권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 시 보조금 지급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동법 일부개정안(박수현 의원, '13.7.) 통과 추진
	수도권 대학 신설이전 규제 완화	-수도권 전체 대학정원은 동결
	대학 총량규제 폐지	-대학 총량규제는 반드시 유지
	공여구역주변지역 규제완화 특례조치	-주한미군 이전지 개발사업은 지역맞춤형 추진전략이 필요 -반한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학교의 수도권 이전 사전방지
	사회복지시설 재정지원금 국비 지원	-전국 광역사회복지시설의 전액 국비지원
	'비수도권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비수도권 대학육성 위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근거법 제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체계 전환(제3의 전문기관)
	지방대학 추진 채용 할당제 도입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제 채용 의무할당제 법제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제 육성 정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	-지방대학 특서오하 및 구조조정 동시 추진
	수도권 대학규제 기조 유지 및 수도권 대학이전 저지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위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학이전 신설 추가허용 중단
	교육·인제 중심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교육과 인재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
	혁신대학중심의 지방대학 발전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여 인재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방 인재 채용 확대	-지역인재 채용 장려(지역인재 채용 비율 35%→50% 상향 조정)
	영유아 무상교육비 전액 국가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수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영유아 보육료 부모에게 직접지급)
지역개발	비수도권 주력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토지이용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 등 폭넓은 제도적 지원책 마련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수도권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신설 등 관련규제 대폭 완화 -비수도권 계획관리지역내 이전기업의 종합지원책 마련 -지방으로 유턴기업 정착 보조금 및 조세 감면지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합의 도출	-국토균형발전의 구조에 대한 합의도출(다핵구조, 자립적경제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 역할 분담 합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수도권의 성장관리계획 기구 설립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협력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회 기능강화 -상생협력 부담금과 조세에 대한 재평가
	초광역권 종합발전계획 추진	-내륙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상생발전·첨단산업 중심 신성장동력 육성)
	기초농산물 국가 구매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허용대상 보조로 변경 -최소허용보조, 감축보조 상한을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수해지역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므로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
	지역 융합클러스터 형성 촉진	-부문별 클러스터 프로그램 정책 실시 -지역 내 지역 간 클러스터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역 창조산업 육성	-지역 차원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강구 -중부권,호남권,영남권 3극 문화·관광 공동체 구축 추진
	지역 과학기술 기반 확충	-연구개발 중간조직 활성화와 이를 통한 연구개발 풍토 조성 -지역의 지식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식창조융합기금 조성·운영
	지역재생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강화 -비수도권 지역 우선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확충	-자립적 지방화가 가능한 규모로 행정구역 통합 조정 -지방 4단체의 법적 위상 제고

